

前자본주의 한국사회의 인구압력과  
사회경제적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종일

前자본주의 한국사회의 인구압력과  
사회경제적 변화

지도 유 석 춘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5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종 일

# 박종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5년 12월 일

## 글의 차례

표의 차례	iii
그림의 차례	iv
우리말 줄임글	v
I. 머리말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5
3. 논문의 구성	6
II. 前 자본주의 사회의 인구변동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이론들	8
1. 인구모델 (Malthusian Model)	9
1.1. 맬더스의 순환론적 인구모델	9
1.2. 新맬더스모델(A Neo-Malthusian Model)	11
2. 상업화 모델 (Commercialization Model)	14
3. 계급관계 모델 (Class Relations Model)	17
4. 제도주의 모델 (Institutionalist Model)	19
III. 이론적 종합	23
1. 17~19세기 한국사회의 분석을 위한 이론들	23
2. '조선봉건제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27

IV. 17~19세기 한국사회의 인구변동과 사회변동 .....	31
1. 인구변동의 추정 .....	31
2. 인구증가와 인구이동 .....	39
3. 인구압력과 농업구조의 변화 .....	45
4. 인구와 국가지배력 .....	50
4.1 인구변동과 국가지배력 .....	50
4.2 인구압력과 국가지배력의 강화 .....	52
V. 결론: 노동집약적 농업화와 국가지배력의 강화.....	56
부록: 1908년의 36개 도시 인구자료.....	61
도움을 받은 글의 목록.....	63
Abstract .....	69

## 표의 차례

<표1> 브레너의 변동모델: 인구와 계급관계의 조합에 의한 봉건제의 변화 .....	18
<표2> 조선사회에 대한 '봉건사회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입장비교.....	30
<표3> 『호구총수』와 『조선왕조실록』의 호구와 인구수 자료 .....	32
<표4> 조선후기 인구에 대한 두 추정치 .....	33
<표5> 조선후기 연기군의 시기별 戶·口摠 추이 .....	38
<표6> 1789년의 도시인구비율에 대한 추정 .....	42
<표7> 1908년의 도시인구비율 .....	43
<표8> 토지생산성의 상승과 노동생산성, 일인당 경지면적의 추이.....	48
<표9> 호구당, 일인당 경작면적의 변화 .....	50

## 그림의 차례

<그림1> 맬더스의 인구모델: 인구규모와 소득변화 사이의 순환모델 .....	10
<그림2> 新맬더스모델: 아시아사회에서 농업의 정체 .....	12
<그림3> 상업화 모델: 봉건제의 붕괴 .....	15
<그림4>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의 제도주의 모델 .....	21
<그림5> 논문의 분석틀 .....	26
<그림6> 『호구총수』와 『조선왕조실록』의 호구와 인구자료 .....	33
<그림7> 조선후기 인구에 대한 두 추정치: 총인구 .....	34
<그림8> 조선후기 인구에 대한 두 추정치: 인구증가율 .....	34
<그림9> 전자본주의사회의 인구증가율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구성 .....	36

## 우리말 줄임글

### < 前자본주의 한국사회의 인구압력과 사회경제적 변화 >

- 17~19세기 조선사회를 중심으로 -

현대 한국사회의 뿌리로서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前자본주의 한국사회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고 그 성격은 충분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조선후기 한국사회에 대한 기존의 역사학과 사회학의 논의는 '조선봉건제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규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구변동을 축으로 삼아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의 방향과 메카니즘을 조명하고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제 II장에서는 전자본주의사회의 인구변동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검토한다. 각 이론들은 인구변화를 독립적으로 혹은 상업화, 계급, 제도와 각각 연결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의 방향과 메카니즘을 조명한다. 특히 제도주의 모델은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와 각 계급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위 이론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제 III장에서는 조선후기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들을 마련한다. 그리고 조선사회에 대한 두 논쟁적 시각 - 조선봉건제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 을 정리하여 본격적 분석의 쟁점을 부각시킨다.

그 다음 장에서는 조선후기의 인구변동과 사회경제적 여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절에서는 인구변화의 추세를 확인하여 주목할만한 인구증가가 기록되었음을 밝힌다. 둘째절에서는 도시인구의 변화를 추적하여 도시상공업의 미비로 인해 인구증가가 대부분 전통적 농업부문으로 흡수되었음을 증명한다.



세제절에서는 인구압력이 잉여노동력과 기술발전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농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조명한다. 네제절에서는 국가가 인구변동을 계기로 변화된 계급상황을 활용하여 세금수취의 강화라는 전략을 취하였음을 보인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두가지 점이 부각된다. 먼저, 조선후기의 인구증가는 토지에 대한 노동력의 집중을 불렀고 잉여노동력의 손쉬운 확보가능성은 '노동절감형'이 아닌 '노동활용형'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증대는 노동생산성의 증대에 뿌리를 두기보다 토지생산성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가능성은 상실되었다. 두번째로 제시되는 결론은 기존의 '조선봉건제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대한 것이다. 두 이론은 경제적 발전/저발전의 척도로 유용하지만 발전의 방향과 메카니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반면에 제도주의 모델은 경제적 발전을 상대화시키면서 그 과정에 주목한다. 한국전자본주의사회의 진정한 현대적 의의는 경제적 발전의 정도가 아닌 그 짜임새이다.

**핵심되는 말:** 인구, 인구압력, 前자본주의사회, 경제발전, 농업생산력, 도시화, 국가지배력, 봉건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제도주의

# I. 머리말

## 1. 문제의 제기

前자본주의사회<sup>1)</sup>의 실체와 그 성격에 대한 탐구는 현재 한국사회의 짜임새를 이해하는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건너야만 하는 강줄기와도 같다. 현대 한국사회의 모체로 한국사회의 비교사적 특성을 해명하는데 끊임없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전자본주의사회의 특성은 이데올로기적, 사회경제적, 혹은 제도적 측면에서 - 비록 많이 축소되었지만 - 지금까지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 전자본주의사회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변동의 한 근원을 확인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sup>2)</sup>(17~19세기) 사회변동의 한 메카니즘을 확인하여 오늘의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방향이 어떠하였든간에 조선후기는 한국사회의 내재적 발전에 따라 도달한 최고(最高)이자 최후의 단계였고, 많은 점에서 오늘의 출발점이자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그 특성에 대한 역사학과 사회학 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조선후기를 매우 논쟁적인 시기로

---

1.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전통사회를 '前근대사회'가 아닌 '前자본주의'사회로 칭하는 것은 '근대'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서구발전모델의 보편성을 배제하고 싶기 때문이다. '근대/前근대'의 구분은 종종 '선진/후진', '서양/동양'의 부적절한 대비로 이끈다. 그에 비해 '자본주의/前자본주의'의 구분은 한국전통사회를 서구편향에서 벗어나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자본주의적 발전을 상대적인 것으로 상정한다.

2. 조선시대는 전·후기, 혹은 전·중·후기로 구분한다. 전·후기로 나누는 대부분의 연구는 임진왜란을 분수령으로 잡고 있으며, 그 구분은 전쟁의 사회경제적 여파, 군사·조세제도의 변화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논문 역시 조선후기의 출발점을 임진왜란이 끝나는 시점으로 잡는데 동의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점은 임진왜란 이후를 출발점으로 하고 외세의 간섭과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외부압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시작되는 개항기 이전을 끝으로 삼는다. 그것은 조선사회의 내재적 변화동력을 확인한다는 연구의 목표에 따른 것이다.

만들어 놓고 있다.

크게 보아 역사학과 사회학의 기존 연구는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을 '봉건사회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두 입장<sup>3)</sup>에서 분석하고 있다. 두 입장은 각각 서구의 경험, 서양의 동양관(東洋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한국자본주의의 특성<sup>4)</sup>을 보는 시각과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봉건사회론은 서구의 근대화 경험을 한국사회의 발전에서 그대로 확인하려는 입장이다. 즉, 조선사회를 전형적인 봉건제사회로 이해하면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봉건제 내부의 해체동력을 확인하고 그 해체기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 관점의 목표가 된다. 다분히 서구의 발전론 - 근대화론의 특성인 진화론적 발전론 - 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인상을 가지게 되는 이 입장은 동양의 특수성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변동의 보편성이 세계사에 관철되고 있다는 전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전형적인 봉건사회인 조선사회는 느린 속도였지만 내재적인 원인 - '상업화와 분업의 진전' 혹은 '계급관계의 변화'<sup>5)</sup> - 에 의하여 해체되면서 자본주의로 옮겨가는 진화론적 발전의 경로를 걷고 있었다.

아시아적 생산양식론(Asiatic Mode of Production)은 한국사회의 저발전을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그 원인을 '국가'와 '공동체'의 특수성에서 찾고 있다. 봉건사회론이 동양사회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 입장은 동양사회의 '정체

---

3. 무수한 역사연구를 구분할 때 두 범주만으로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역사연구에서 사회학의 이론적 맥락과 닿아있는 주요한 줄기이다. 그리고 역사학 내부에서도 논쟁적인 대립을 보인다.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호철, 1988. 이영훈, 1988b

4.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전근대사회인식을 연결하고 있는 다음의 두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김용섭, 1988, 「근대화 과정에서 농업개혁의 두 가지 방향」,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 대왕사. 그리고 이영훈, 1988, 「조선봉건론의 비판적 검토」, 같은 책.

5. 맑스주의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생산력' - 분업과 상업화의 진전 - 과 '생산관계' - 계급관계 - 로 나눌 수 있다. '조선봉건제론'에서는 전자를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후자는 부수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조선사회를 봉건제 사회로 보고 그 해체를 규명하는 역사학의 흐름을 브레너의 논의를 빌려 '新스미스주의적 맑스주의'로 규정한다. R. Brenner, 1986.

성(停滯性)'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맑스에 따르면 '전제적인 중앙집권 국가'와 '광범위한 자급자족적 공동체'를 두 핵으로 하는 동양의 정체된 사회는 결코 내재적 발전의 동력을 가지지 못하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sup>6)</sup> 이렇게 동양의 저발전을 강조하는 시각은 물론 서구편향적인 것이지만, 한편으로 폭넓게 보자면 맑스에서 출발하여 생산양식론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동양사회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입장들이 모두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포함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침략의 정당성을 가장하기 위한 논리로서 정체성론(停滯性論)과 타율성론(他律性論)을 핵심으로 삼았던 식민사관(植民史觀)도 넓게 보아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논문은 전자본주의 한국사회에 대하여 상반되는 위의 해석들을 토지에 대한 인구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검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구변화는 서구의 자본주의 이행논쟁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다른 변인과의 연관을 통해서 사회변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인구변화는 상업화모델 혹은 계급관계모델에서도 중요한 독립변인 혹은 종속변인으로 취급된다. 인구와 연관된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 - 혹은 상관관계 - 를 확인함으로써 전자본주의사회 해체의 보편적 모델을 확정하거나 혹은 각 사회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인구학적 변인은 모든 사회과학연구의 기반을 이룬다. 현재까지 조선사회에 대해 이루어진 역사학과 사회학의 연구성과가 그 기본자료의 검토에도 소홀했음을 생각할 때 기존자료의 해석을 통한 인구변동의 이해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 제(諸)세력들의 상호관계 변화와 그 결과를 유추해 볼 수도 있다. 특히 17~19세기의 인구변동에 대해 가장 지배적인 조직으로서 그에 합당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국가', '지주', 그리고 '농민'의 대응이 어떠한 형태의 사회변동을 낳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6. 맑스, 1988,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 지평. 36~37쪽

위의 배경 속에서 이 논문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위하여 씌어지는 것이다. 첫째,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경험하기 이전인 17~19세기 조선사회의 인구변동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가? 인구변동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이 질문의 답에 해당된다. 둘째,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농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으며, 나아가 경제발전 혹은 저발전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즉, 구체적인 인구변동의 윤곽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경제적 구조와의 관련성을 해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인구학적 변인을 통해서 볼 때, 한국전자본주의사회에 대해 상반되는 역사학의 해석 - 봉건제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 은 어떤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국전자본주의사회의 변동이 진행되고 있었던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이 현재 한국자본주의사회의 특징과 관련하여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해명에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다.

##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전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 발전/저발전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인구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모델화 시킨다. 그리고 각 모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조선사회의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종합적 이론들을 구성한다. 둘째, 조선후기의 변동을 각 모델의 적합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 이론들에 의하여 살핀다.

첫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전자본주의사회의 변화모델은 구체적인 사례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들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작업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각 이론들에 해당되는 문헌을 점검하여 모델을 구성할 것이다. 각 모델은 핵심적인 변수 - 인구변화, 상업화, 국가, 계급, 기술발전 등 - 와 그들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 바탕 위에서 조선사회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종합적 이론들을 구성한다.

둘째로 이 논문의 핵심이 되는 조선후기의 해체기적 특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우선 일차 인구자료의 분석과 기존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18, 19세기 인구변동의 실체를 그릴 것이다. 그리고 역시 일차자료 - 『호구총수』와 『통감부통계연보』 - 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도시인구비율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것이다. 그밖에 기존 역사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선행된 연구문헌들을 종합하여 대립되는 두 입장 - 조선봉건제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 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구변동에 대한 함의를 추출하여 대조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와 이차문헌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다.

### 3.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한국 전자본주의사회 해체기의 특성을 다양한 전자본주의사회변동의 이론들을 가지고 인구변동의 과정에 주목하여 해명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쓰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II장에서는 전자본주의사회의 변동을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인구변동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 인구모델, 상업화모델, 계급관계모델, 그리고 제도주의 모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맬더스(Thomas Malthus)로부터 시작하는 인구모델은 인구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관한 정태적이고 거시적인 모델이지만 변동의 과정에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新맬더스모델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시아사회의 인구성장과 농업사회의 인구흡수가 어떠한 농업구조의 변화를 낳았는지 밝히게 된다. 둘째로 인구모델의 정체성을 비판하며 서구 자본주의의 성립을 진화론적으로 묘사하는 '상업화모델'이 있다. 셋째로 '계급관계모델'은 인구변동의 영향을 계급관계에 부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새로운 일반론이다. 넷째, '제도주의 모델'을 다룬다. 제도주의 모델은 각 계급과 국가를 행위자로 취급하면서 그들이 인구변동이라는 외부적 압력에 대응하여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이 비중있게 다루어 진다.

제 III장에서는 위의 네 모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조선사회의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종합과 모델의 구성을 시도한다. 아시아사회의 일부로서 조선사회가 갖는 특징 - 환경조건 등 - 과 분석의 대상이 될 지배구조 - 국가의 절대적인 힘 등 - 의 측면에 맞추어 이론적 종합이 시도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선봉건제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으로 대표되는 한국사연구의 두 대립적 시각을 종합모델의 각 부분에 맞추어 정리한다.

제 IV장은 조선사회의 인구변동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그 기본작업으로서 인구변동을 추정하는 작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찾아본다. 둘째, 도시인구의 비율을 점검하여 인구의 이동 혹은 노동력의 흡수향방을 추적한다. 셋째, 인구학적변인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조명한다. 인구압력이 노동력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농업구조에 미친 영향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농업구조의 변화는 기술발전의 가능성도 함께 결정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 네째절에서는 인구변동과 국가지배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어떤 것이었고 경제변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V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종합하고 그 의의를 찾는다.



인은 다양한 이론의 비교와 통합을 위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 1. 인구모델(Malthusian Model)

### 1.1. 맬더스의 순환론적 인구모델

맬더스는 인구와 경제발전에 관한 고전적인 순환모델을 정식화했다. 그의 인구이론은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인구의 증감이 발생할 것이지만 결국은 한 사회의 수용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규모의 인구로 조절될 것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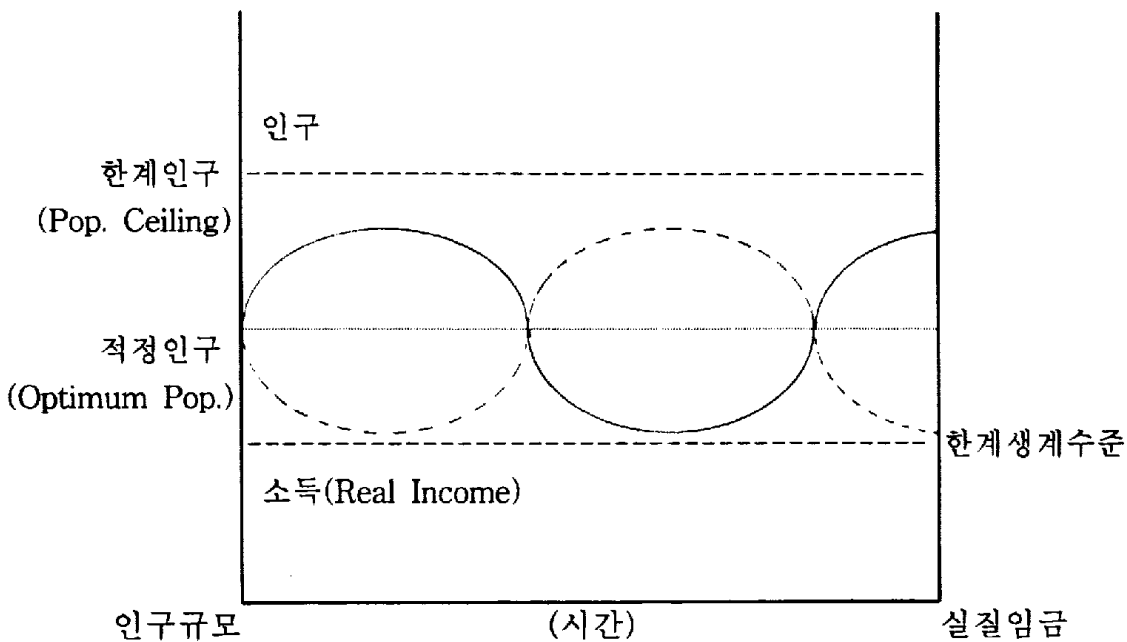
그의 인구론은 다음의 두 가지 전제와 하나의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두 전제는 다음과 같다. '식량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異性간의 열정(passion)은 필요한 것이고 거의 변함없는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한 가정은 '인간의 번식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하여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기초 위에서 맬더스는 자연법칙에 의하여 인구의 증가가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한다.<sup>10)</sup>

맬더스의 인구억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자연의 법칙에 의한 '적극적 억제(positive check)'와 인간에 의한 '도덕적 억제(preventive check)'가 그것인데, 가난과 질병, 그리고 전쟁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억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만혼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억제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다.<sup>11)</sup> 결국 인구증가는 전체사회 구성원의 실질소득을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소득이 한계생계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될 정도의 인구증가가 발생하면 기근과 질병으로 대표되는 자연적인 치료책을 통해서 인구의 감소가 발생한다.

10. 권태환·김두섭, 1990. 39-40쪽

11. 그 후에 맬더스는 피임이 도덕적 억제의 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정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적극적 억제를 중심에 삼았다. 권태환·김두섭, 1990. 40쪽

맬더스가 제시하는 인구변동과 실질소득의 변화 사이의 관계는 < 그림1 >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거의 모든 생산이 한정된 면적의 토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본주의사회에서 '한계생계수준에서 적정인구의 유지', 그리고 '한계생계수준 혹은 그것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실질소득유지'가 그림과 같은 매우 정적인 모델의 핵심이다.



< 그림1 > 맬더스의 인구모델: 인구규모와 소득변화 사이의 순환모델

포스탄(M. M. Postan)과 르 로이 라뒤리(E. Le Roy Ladurie)는 맬더스의 순환적 인구모델을 보다 탄력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제의 등장을 설명하였다. 포스탄은 14~15세기의 인구급감이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제의 등장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었고, 르 로이 라뒤리는 긴 16세기의 인구증가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장기파동의 시각에서 설명하였다.<sup>12)</sup>

맬더스의 이론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한 사회의 인

12. 포스탄·해처, 1985. 그리고 L.R. 라뒤리, 1985.

규모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소득의 향상을 매개로 하여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둘째, 한 사회의 한계생계수준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변화에 따라 한계생계수준과 전체 인구규모도 변화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전개와 관련하여 위의 두 비판은 주목할 만하다. 첫번째 비판은 인구모델의 정태성을 비판하면서 상업화, 분업의 진전, 혹은 기술의 발전<sup>13)</sup>을 통해서 인구의 증가가 극복될 수 있고, '인구증가-소득증가'의 상황이 동시에 성취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곧이어 다루게 될 '상업화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산업혁명은 맬더스적인 순환모델 - 전자본주의적 인구모형 - 을 극복한 경험적인 비판으로 맬더스의 정태적 모델을 벗어나는 것이다. 두번째 비판은 '계급관계모형'과 관계가 있다. 인구의 변화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압력으로 다가오지만 계급상황에 따라 일부 구성원은 생계수준의 보다 강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계급관계에 따라 인구변동에 대한 경제적 변화의 방향은 기존 생계수준의 유지 혹은 실질소득의 상승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같은 수준의 인구변동, 혹은 상업화를 경험하더라도 그 결과는 실질소득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한계생계수준으로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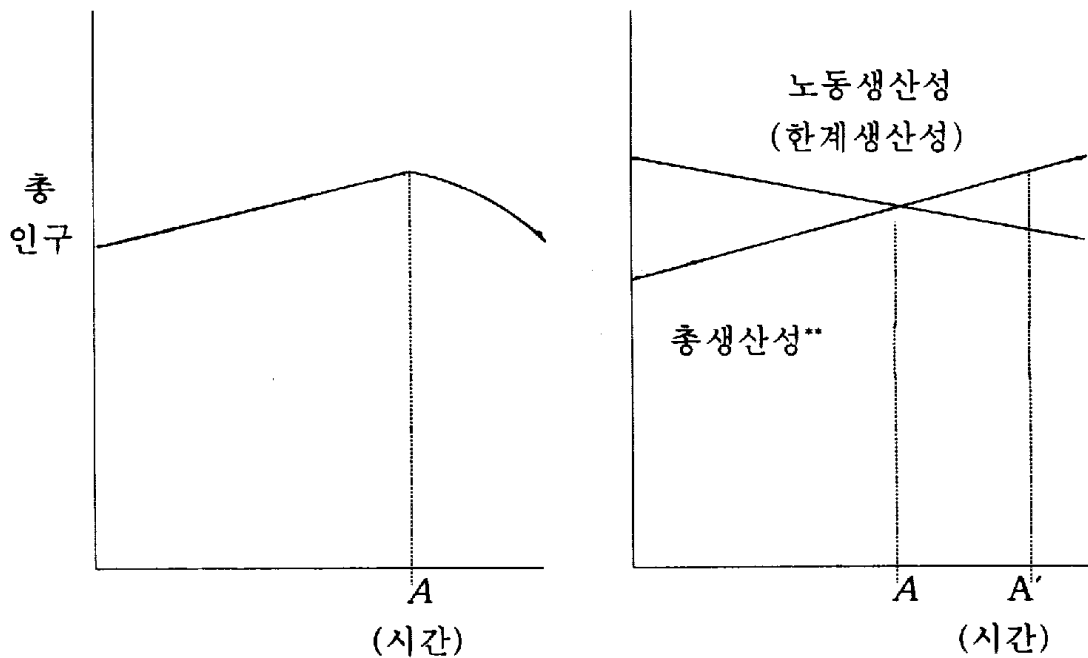
## 1.2 新맬더스모델(A Neo-Malthusian Model)<sup>14)</sup>

---

13. 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는 맑스주의 경제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산력의 꾸준한 상승경향이 맑시즘의 기본가정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예는 노스의 서양경제사 해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 D. North & R. Thomas, 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Cambridge Univ. Press

14. 인구학에서 신맬더스이론은 인구억제의 수단으로 피임을 강조하는 시각을 일컫는다(권태환·김두섭, 1990. 44쪽). 그러나 경제사에서 신맬더스주의는 구체적인 사회집단을 인구와 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 포함시키는 시각을 칭하기도 한다(『신자본주의논쟁』, 127쪽). 이 논문에 쓰인 '新'맬더스모델은 어느 학파를 일컫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맬더스의 인구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시아 사회에 적용

유럽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의 경우에 인구모델의 유효성 - 세밀한 분석능력 - 이 어느 정도 상실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회변동의 기본배경으로 역할하는 인구학적 변인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사회의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둘러싸고 인구모델의 의의는 다시금 살아나는 듯하다. 노동집약적인 벼농사를 중심으로 삼고, 그에 따라 조밀한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아시아사회의 특성<sup>15)</sup>이 근대산업과 제도의 이식과정에서 과중한 인구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사실이다.



(가) 인구증가와 맬더스 반동 (나) 생산량의 증가와 맬더스반동의 지연

한 연구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15. 쌀 농사를 통해서 아시아사회는 같은 면적의 유럽사회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의 약 3배~6배 까지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주경철 옮김, 까치, 1995. 그리고 중국에서 7-8세기에 광범위한 인구의 증가가 가능했던 이유도 남중국의 논농사지대 확장에서 찾고 있다. M. Elvin, 1973,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Eyre Methuen Limited, London 204쪽

(\*\*총생산성은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2> 新맬더스모델: 아시아사회에서 농업의 정체

<그림2>의 (가)와 같이 인구모델에서 인구한계(population ceiling)의 도래(A)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증가를 농업노동의 집약화로 흡수한 경우는 기술발전 없이 생산성의 증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인구반동의 도래를 늦출 수 있다. 즉, (나)의 경우처럼 노동생산성은 계속 하락하여도 늘어난 노동투입에 의한 토지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 총 생산성의 현상유지 혹은 증가가 가능한 것이다.<sup>16)</sup> 이때 인구반동의 도래는 A에서 A'의 시점으로 지연된다. 비농사지역에서 농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부문에 노동력의 흡수 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노동력의 집중과 한계생산성의 하락은 결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기어츠(Cliford Geertz)는 18~19세기 자바 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인구의 증가와 그것을 흡수할 수 없었던 '이중경제'<sup>17)</sup>의 존재를 통해서 농업과 산업전반의 침체(involution)를 설명하고 있다.<sup>18)</sup> 황(Philip C.C. Huang)은 19세기 북중국의 농업이 역시 같은 이유로 저발전을 경험했다고 분석한다.<sup>19)</sup>

新맬더스모델도 많은 비판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구변동의 장기적 흐름과 경기변동을 연결시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지역내의 국면적인 변화를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특히 상업화의 경우는 인구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전근대의 순환적 인구모델이 극복되는 계기로서 이해되고 있다. 고전경제학이론이 인구의 변동에 대하여 함의하고 있는 바는 인구의 증대가 분업과 상업화의 진전을 자극하여 맬더스반동을 극복하고

---

16. 총생산성은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요소로 나뉜다. ('노동생산성 = 총생산물/투여노동' '토지생산성 = 총생산물/경작면적') 따라서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는 경우 토지생산성은 향상되지만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게 된다. 총생산성은 둘의 곱합에 따라 결정된다.

17. 산업의 근대부문과 전통부문의 엄격한 분리를 말한다.

18. C. Geertz, 1963.

19. Philip Huang, 1985.

근대적 경제구조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서구경험에 의존한 낙관적인 진화론인 것이다.

둘째, '인구증가-노동집약적 농업화'의 발생은 이론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그 사회의 계급관계, 혹은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황(Huang)은 중국의 경우 경제적 저발전이 인구압력에 더하여진 '제도적 특성' - 시장의 미발달, 농업이외의 고용가능성 결여 등 - 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sup>20)</sup> 서로 다른 계급관계도 동일한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강한 지주계급은 농민을 토지에 긴박시킬 것이고, 강한 농민 계급은 토지소유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 2. 상업화 모델(Commercialization Model)<sup>21)</sup>

상업화모델은 인구변화와 경제저발전의 순환적 흐름을 특징으로 하는 인구모델의 전자본주의사회상을 '진화론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제시하고 있다. 인구압력(population ceiling)은 더 이상 경제발전의 족쇄가 되지 못한다. 서유럽의 역사가 실증하듯이 꾸준히 진행된 상업화와 분업, 그리고 도시화를 통해서 인구성장과 경제발전이 동시에 성취될 수 있다. 상업화모델은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서구의 경험에 부합하는 모델이며 19세기의 낙관적 진화론과도 일맥상통한다.<sup>22)</sup>

---

20. Philip C. C. Huang, 1991, "A Reply to Ramon Myer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0, no.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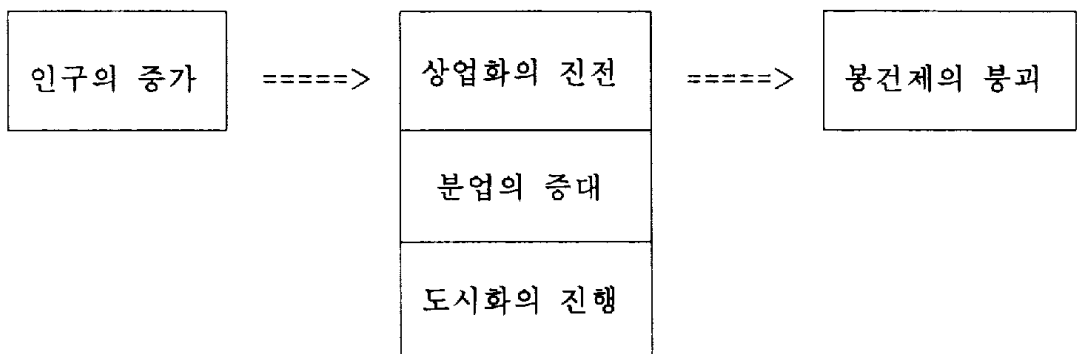
21. 상업화모델의 핵심적인 의미 - 고전경제학과 생산력주의적인 맑시즘을 통칭 - 는 브레너의 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Brenner, 1977.

22. 물리적인 인구밀도의 증가와 분업의 확대를 연결시키고 있는 뒤르케임의 시각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Free Press, New York, 1984. 그리고 '근대화론'은 이러한 발전론을 비서구사회에까지 물 역사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스미스(A. Smith)는 개별 행위자의 합리적인 이윤추구 활동이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생산활동을 특화(specialization) 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생산의 특화는 시장판매를 위한 것이며 생산의 증가에 따라 시장의 발전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시장의존도의 증가로 이어지고 경쟁적인 시장판매를 통해서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극대화라는 명제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자리잡는다.<sup>23)</sup>

시장을 위한 생산의 확대와 분업의 증가는 인구의 충분한 증가 - 노동력의 확보 - 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인구의 증가는 경제발전의 장애라기보다 오히려 보조동력으로 기능한다. 인구의 증가가 시장을 매개로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발전은 성취된다.

스위지(P. Sweezy)나 왈러스타인(I. Wallerstein)과 같이 자본주의 경제의 등장을 무역의 확대,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의 확대로 파악하는 ‘스미스주의 맑시스트’<sup>24)</sup>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맑시즘의 고전적 명제 가운데 이들은 생산력의 발전이 결국은 생산관계의 변화를 끌어 낼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 그림3 > 상업화 모델: 봉건제의 붕괴

23. 아담 스미스, 『국부론』

24. 이 칭호 역시 브레너에 의해 붙여진 것이다. R. Brenner, 1986. 40쪽

상업화모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인구모델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변화의 추세를 확인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국면적인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단기적으로 인구증가와 상업화의 진전이 국지적인 계급관계의 영향으로 인하여 봉건제로의 회귀 - 재판농노제 - 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브레너의 연구<sup>25)</sup>는 고전적이다.

둘째, 상업화의 성격이 문제시될 수 있다. 상업화 모델에서의 '상업화'는 기업가적인 이윤동기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행위와 그 결과로 이해되며, 시장경제의 원리가 경제발전을 자동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상업화가 반드시 이윤동기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된다. 폴라니(Karl Polanyi)에 따르면 자기조정적(self-regulating) 시장경제의 등장 이전에 경제활동의 원리는 이윤의 획득에 있지 않았다.<sup>26)</sup> 중국의 경우에도 상업화는 이윤획득을 위한 기업가적 동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구압박에 의한 '생존가능성의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다고 황(Huang)은 주장한다.<sup>27)</sup>

셋째, 상업화모델은 '국가'의 역할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는 상업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의 국가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상공업의 중요한 부분을 국가지배 아래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상업화의 영향력과 비교해서 결코 왜소한 것이 아니었다. 한 예로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은 국가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예를 들어, 공공투자의 확대)과 제도수립(예를 들어,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근대적 경제성장을 수월하게 이루었으나, 청조의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 국가의 지배체제와 정책의 영향에 대한 부분 - 국가와 경제 - 이 좀 더 중요하

---

25. R. Brenner, 1976.

26. 봉건제의 몰락 이전까지 모든 경제체제는 호혜(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자급자족(householding)에 기초하여 조직되어 있었다. (칼 폴라니, 1991, 『거대한 변환』, 박현수 옮김, 민음사, 76쪽)

27. Huang, 1991, "A Reply to Ramon Myers", i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0, no. 3, (August 1991)



게 고려되어야 한다.

### 3. 계급관계 모델(Class Relations Model)

계급관계 모델은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구성하고 있다. 인구변동과 경제적 변화의 사이에 '계급관계'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인구변동이 가지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계급관계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인구변화는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연결되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브레너는 계급관계모델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sup>28)</sup> 동유럽과 서유럽의 인구변동과 경제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그는 동일한 형태의 인구변동을 경험하였더라도 그 사회의 내재적인 계급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제적 변화가 나타났음을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유럽과 서유럽은 15세기의 인구감소를 함께 경험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사뭇 달랐다. 농민들 스스로 촌락제도망을 가지고 있었고 촌장도 직접 선출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서유럽의 농민들은 인구의 감소가 농민협상력의 증대로 나타나도록 영주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노제의 억압은 약화되었다. 반면에 동유럽은 농민의 독자적인 정치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촌락의 규모도 작고 한 영주에 의해 독립적으로 지배되고 있었다. 그래서 인구감소는 영주의 수입감소로 이어졌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영주는 농민을 더욱 수탈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였다. 결국 농노제는 강화되었다.

다음의 표는 인구의 증감과 상관없이 계급관계에 따라 봉건제의 강화와 약화가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8. R. Brenner, 1976.

계급관계	인 구	인구의 증가	인구의 감소
	지주 >* 농민	봉건제의 강화	봉건제의 강화 (15세기 동유럽)
	지주 <* 농민	봉건제의 약화	봉건제의 약화 (15세기 서유럽)

(\* 부등호 표시는 계급관계의 상대적 우위를 계량적으로 나타낸다)

< 표1 > 브레너의 변동모델: 인구와 계급관계의 조합에 의한 봉건제의 변화

계급관계모델은 인구변동의 국지적, 단기적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며 한 사회의 국면적 변화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국가를 계급과 같은 하나의 집단적 행위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가 계급상황에 우선하는 경우를 상징할 수 없으며 보조적인 설명요인으로서 기능한다는 약점을 지닌다.<sup>29)</sup>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에 국가의 지배력은 계급이라는 변수의 보조적인 범주이기는 커녕 지배적인 범주로 자리잡고 있었다. 둘째로 계급관계모델은 거시적으로 볼 때 인구모델의 한계 속에 놓여 있다. 계급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인구변화<sup>30)</sup>는 독립변수의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29. Dongno Kim, 1994, *Peasants, State, and Landlords: National Crisis and the Transformation of Agrarian Society in Pre-colonial Korea*, Ph.D.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19-20쪽

30. 유럽의 중세를 통해서 볼때, 장기적인 인구파동(population wave)은 계급관계와 상관없이 경제적 변화를 결정하였다.

#### 4. 제도주의<sup>31)</sup> 모델(Institutionalist Model)

역사를 다루는데 있어 제도적 접근은 사회변동의 내부적 조건, 즉 제도적 지형을 검증하여 각 사회의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변화 혹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sup>32)</sup>’의 문제를 중심으로 가져오고 있다. 제도주의는 역사상의 한 시점에서 각 사회세력 사이의 상호관계의 산물인 제도가 그 이후의 사회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때문에 사회변동의 내재적 원인을 추적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제도주의 가운데 新제도주의이론은 ‘제도주의->행태주의->신제도주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이론사적 맥락을 찾아 볼 수 있다.<sup>33)</sup> 예전의 제도주의가 상이한 사회구조에 대하여 비교분석보다는 각각의 행정, 법률, 정치 구조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에 그친 데 비하여 신제도주의는 각 사회의 상이한 상호작용 양식을 비교의 맥락에서 규명하려 한다. 제도주의에 대한 반발로 성립한 행태주의이론이 각 사회간의 차별성보다는 미시적 행위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거대이론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이는 결국 각 사회의 독특한 상호작용 유형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신제도주의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성격을 지니며 맥락의 비교를 통하여 개별국가 사례와 범국가적 일반성 사이를 매개한다.

‘역사제도적 접근’<sup>34)</sup>의 차별성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

31. 통칭 ‘제도주의’에는 다양한 갈래와 주장이 있으나 대부분의 논자들은 제도를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양식을 설정하는 공식적 규범 및 비공식적인 제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D. North, 1981. 201~202쪽

32. 맥락적 상황에서 한 시점의 조건이 그 이후의 시점에 발생하는 변화에 영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쓰인 용어이다. 그 예는 K. Thelen & Sven Steinmo, 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ructuring Politics*, Cambridge Univ. Press 를 참고.

33. Paul J. DiMaggio & Walter W. Powell ed., 1991,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The Univ. of Chicago Press. 의 Introduction 부분.

34. 신제도주의는 ‘역사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합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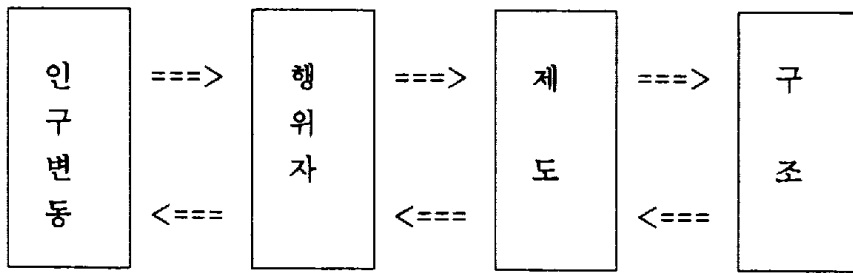
드러난다. 맑스주의와 같은 사회결정론은 국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집단간의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과 그로부터 결과되는 제도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없다.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맑스의 개념은 아시아사회에서 국가와 제사회세력간의 상호작용이 가지는 독특한 양식을 표현하지 못한 끝치덩어리를 상징하고 있다. 반면에 베버주의 국가론자들은 국가와 제사회세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주목하여 국가를 사회과학연구의 중심으로 옮겨 놓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국가와 제사회세력의 관계를 정형화된 것으로 파악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사회의 관계가 다양한 형태로까지 변화가능한 제도의 개념에 이르고 있지 못한 것이다.<sup>35)</sup>

제도주의 모델은 국가와 제사회세력(계급)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장점을 지닌다. 행위자로서 계급과 국가를 상징하고 그 매개물인 제도와 그 변화를 통해서 사회변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앞의 제시된 모델들과 비교해 볼 때, 인구변동은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측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상업화는 각 행위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위 모델들이 포괄하지 못했던 국가와 계급의 역할도 각각을 행위자로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측면과 피동적인 측면 - 제도를 형성시키는 면과 제도의 규정을 받는 측면 - 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

선택이론을 핵으로 하는 후자와 달리 전자는 공유되는 방법론적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신제도주의의 구분에 관해서는 K. Thelen & Sven Steinmo, 1992. 7~10 쪽을 참고.

35. 이호철, 1993, 「사회, 국가, 그리고 제도 - 정치경제의 제도론적 접근」, 『한국과 국제정치』 제 9권 2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그림4 >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의 제도주의 모델

위의 그림처럼 제도주의모델은 인구의 증가가 행위자의 '선택구조'<sup>36)</sup>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행위의 패턴이 나타나도록 하고,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거쳐 사회구조의 변화에 이르게 되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 인구의 증가가 가져오는 단순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넘어서서 그 영향이 행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지는 제도적 변화를 거쳐서 구조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종합하여 볼 때 이 논문에서 제도주의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구체적인 역사분석에서 국가를 행위자의 일부로 파악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추동적인 역할을 핵심으로 가져오고 있다. 노스는 유럽의 역사를 분석하는 가운데 국가에 의해 마련된 제도 - 공정한 경제행위가 혹은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임의 규칙 - 를 통해 인구와 경제발전의 맬더스 한계(population ceiling)이 극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둘째, 메타이론적 차원에서 사회와 국가의 균형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앞에 제시된 모델들은 국가와 사회세력(혹은 계급)의 관계가 모호하거나 혹은 일방적 관계를 표현 혹은 내포하고 있다. 新맬더스 모델을 포함하여 맬더스 모델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 자체도 분명하지 않으며, 계급모델은 국가를 사회에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상업화모델은 국가의 역할을 적극

36. '선택구조'라는 용어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적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여전히 국가와 사회의 역동적인 관계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제도주의모델은 국가를 사회제세력 - 혹은 계급 - 과 더불어 같은 차원에 위치한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형성의 과정에서 양자의 상호작용이 중심에 놓이는 균형이 이루어 진다.

마지막으로 제도주의 모델은 '행위자-제도-사회구조'의 사회변동 모형을 내재하고 있다. 인구변동을 외재변수로 삼을 때, 각 행위자는 외부적 충격에 대하여 사회구조 내의 위치에 따라 새로운 반응 - 행위 - 을 보이고 그 집합적 결과는 제도의 형성을 통해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

### Ⅲ. 이론적 종합

#### 1. 17~19세기 한국사회의 분석을 위한 이론틀

17~19세기 조선의 인구증가와 그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에 제시되었던 모델들을 종합하여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구모델과 상업화 모델을 한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두 모델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구증가로 인한 압력이 크면 상업화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분업을 통한 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반면에 상업화의 진전은 적절한 인구증가를 바탕으로 도시화, 분업의 증대를 이끌어 낸다. 인구압력과 상업화는 각각 저발전과 발전의 기본조건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모델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저발전의 조건으로서 인구압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구압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 발전을 지속, 강화시킬 수 있는가'이다. 인구압력은 과중한 잉여노동력을 발생시키고 그 노동력이 어떻게 흡수되는가에 따라 기술발전의 형태를 결정짓게 되어 최종적으로 경제발전/저 발전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제도주의 모델은 위의 두 모델과 상충되는 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 인구모델, 혹은 상업화 모델과 결합하여 장기적인 변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틀을 이 모델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변화라는 외재변수가 인구모델과 상업화모델의 시초 조건을 결정하면, 제도주의 모델은 각 계급과 국가를 행위자로 파악하여 인구변화 - 각 행위자들에 대한 행위제약 - 에 따른 그들의 상호작용이 낳는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의 증가는 농민들에게 한정된 경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쟁을 유발시키고 거시적으로 지주의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편 전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는 세수입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주에 대한 압력을 강화

할 수도 있고 계급관계의 추이에 따라 농민으로부터 직접 수취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나아가 계급관계에 대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지주와 농민을 포함한 사회계급일반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수탈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특히 국가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자본주의 아시아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를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하여 검토할 수 있는 제도주의 모델은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주의 모델은 인구모델 혹은 상업화모델과 결합하여 조선후기의 인구변동과 그 영향력을 살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세째, 계급관계모델은 제도주의 모델과 결합하여 인구모델과 상업화모델을 통해 주어진 조건들이 행위자들의 전략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인구증가/감소에 따라 계급관계의 구도는 변화하고 기존체제의 유지, 강화 혹은 붕괴가 결정된다. 상업화의 진행도 공간적 분화를 통해 각 계급이 처한 조건을 변화시켜 이전과 다른 상호작용 형태를 낳는다.

각 모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분석하기 위한 세 중간변수 - '도시화', '잉여노동력->기술발전' 그리고 '국가지배력' - 가 설정된다.

첫째, 인구모델과 상업화모델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인 '도시화'는 인구변화의 향배를 결정하는 요소이자 결과이다. 당연히 도시화는 인구의 증가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고, 인구모델에 따르면 도시화의 미흡은 농업인구의 과다한 집중으로 이어져 농업의 저발전, 나아가 전 산업의 저발전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도시의 성장은 상업화의 결과로 해석되며 상업화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거꾸로 도시화의 진행 - 구체적으로는 도시인구의 크기 - 을 측정하여 인구변화와 상업화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잉여노동력->기술발전'은 인구모델의 핵심을 담고있다. 인구의 증가는 잉여노동력을 발생시키고 손쉬운 노동력의 수급가능성에 따라 기술발전은 노동



력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반면에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부족을 통해서 노동절감형의 기술발전을 자극한다. 노동력을 이용하는 기술발전은 경제적 침체를, 절감형의 기술은 경제발전을 낳는다. '잉여노동력'은 실제 연구를 통해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작적 변수(operational variable)이다.

세째, '국가지배력'은 제도주의모델과 계급관계모델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37) 우선, 국가지배력은 그 대상이 되는 각 계급 - 지주와 농민 - 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관계모델을 포함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각 계급과 국가의 상호작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제도주의 모델의 요소를 가지게 된다.

38) 특히 제도주의 모델에 따르면 각 계급의 성장은 국가로 하여금 효율적인 제도의 수립을 강제하여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최종적으로 '경제발전/저발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발전/저발전'은 각 모델에 포함 - 혹은 암시 - 되어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인구모델은 저발전, 상업화모델은 발전을 포함하고 있고, 계급관계모델과 제도주의모델은 각 조건에 따라 발전/저발전이 결정된다.

<그림5>는 조선후기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최종모델이다. IV장에서는 그림의 각 부분들을 조명한다. 첫번째 인구변동의 추정치는 기본작업으로써 독립변수인 인구변화의 양상 - 인구증가 혹은 감소 - 을 추적한다. 두번째 절인 '인구증가와 인구이동'에서는 인구변동과 도시화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세번째 절 '인구학적 변인과 농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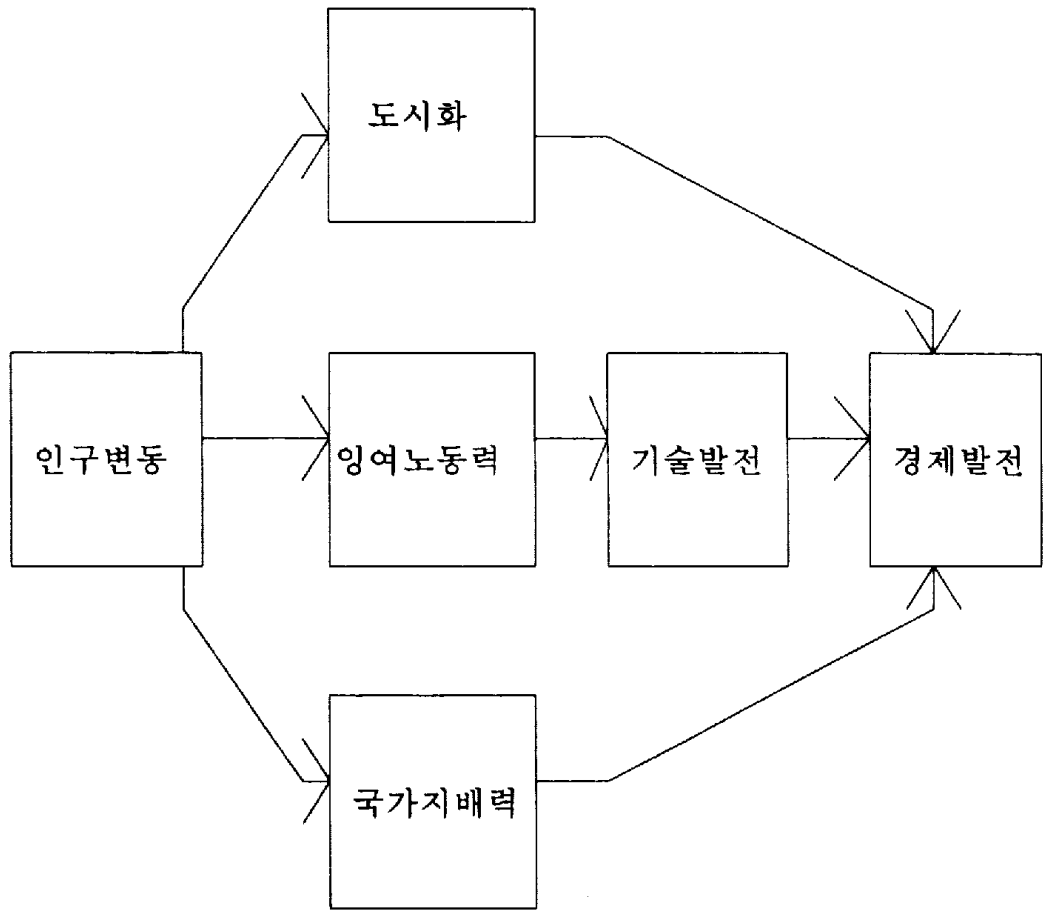
---

37. 계급관계를 따로 떼어 놓지 않은 것은 조선사회가 가진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계급'(경제적 구분)보다 '신분'(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자본주의사회의 분석을 위한 것이라면 '계급관계'가 독립된 변수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38. 제도주의모델과 계급관계모델의 요소는 '잉여노동력->기술발전'에서도 각각 찾을 수 있다. 인구증가->잉여노동력의 발생은 각 계급의 새로운 행위제약을 통해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형성한다. 잉여노동력의 발생은 계급의 협상력에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계급관계의 변화를 낳는다.

의 변화'는 '인구변동->잉여노동->기술발전'의 고리를 검토한다. 마지막 절은 '인구->국가지배력'의 관계를 검토한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인구	사회경제적변화



< 그림5 > 논문의 분석틀

## 2. '조선봉건제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이 논문이 가지는 의미를 역사학의 연구성과와 연결하고 다음 장의 분석을 위한 예비작업의 일환으로 삼기 위해 기존의 연구업적을 <그림5>의 구도에 맞추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논문의 서두에서 다른 대로 '조선봉건제론'<sup>39)</sup>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sup>40)</sup>으로 크게 구분하여 위의 각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인구변화에 대하여 두 입장은 매우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봉건제론의 경우, 인구증가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인구압력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적정한 인구증가는 노동력의 분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은 인구압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인구압력은 저발전의 한 조건이다.

둘째, '도시화'에 대하여 두 입장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봉건제론은 도시의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농업부문의 분화와 생산력발전을 토대로 하여

---

39. 한국사에서 '봉건제' 개념은 넓은 의미의 봉건제 - 유럽역사에서 '장원제'와 '주종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협의의 봉건제가 아니라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구성으로서의 봉건제 - 에 해당하며 정형화된 형태로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한국사에 대한 봉건제론은 이중적인 개념화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서구사회를 기준으로 하여 노예제 사회와 자본제 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는 생산양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 둘째, 모든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 이전단계에 경제외적 강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구성을 지칭하기도 한다. 조선사회를 봉건사회로 규정하는 한국의 역사학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혼용이 두드러진다. (최재현, 1992b)

40 이 개념은 '정체성'과 '전제력'을 동양사회의 특징으로 파악하는 서구지성사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페리 앤더슨, 1990.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505~516쪽)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사관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모습은 보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은 정체적 모습을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변화과정을 규명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미야지마(宮嶋博史)는 제1차, 제2차 등의 형태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구분하여 동양적 유산을 계승하면서 사적소유의 진전과 같은 변화를 담아내려고 노력한다(이영훈, 1992). 나까무라(中村哲)의 '중간적 지주제'도 유사한 형태이다(中村哲, 1989).

농촌의 인구는 계층분화를 겪게 되고 잉여 노동력은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의 상공업발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sup>41)</sup> 도시는 점차 행정도시의 성격을 탈피하여 상공업도시로 탈바꿈하였다. 도시수공업부문에서 선대제와 상업부문에서의 여각, 객주의 등장은 상업의 새로운 기운으로 이해되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였다.<sup>42)</sup> 그리고 전체인구의 증가는 농촌의 계층분화를 가속화시켜 도시의 인구유입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도시상공업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봉건제론의 입장에서는 도시인구증가가 농촌의 인구증가를 능가하는 정도로 이루어졌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은 국가를 상위지배구조로 삼고 공동체를 하위의 구조로 삼는 자급자족적인 공동체의 이미지로서 아시아 사회를 외부의 압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체될 수 없는 성질의 사회구성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도시의 발전은 행정과 지배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 농촌의 광범위한 인구증가는 도시의 상공업 부문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토지경작의 영세화, 한정된 토지의 노동력 다수투입의 형태로 나타났다.

세재, '잉여노동력의 발생과 기술발전'에 대한 두 입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봉건제론은 조선후기의 농업생산력 증가가 사회변동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였고 따라서 인구의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생산력 증대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농업생산력의 증가도 인구의 증대에 의한 노동력의 대량투입과 토지생산성의 증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주로 단위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존하였다는 입장이다.

생산력의 증대는 조선사회는 봉건사회의 특징이 해체되어가고 새로운 생산양식 - 자본주의 - 을 향한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발전을 통

---

41. 농촌인구의 분해와 잉여노동력의 도시유입에 대한 주장은 다음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성윤, 1994,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증가와 공간구조의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제43집, 문학과 지성사.

42. 오미일, 1987, 「조선후기 상품유통 연구현황」, 『한국중세사회해체기의 제문제』, 근대사연구회編, 한울.

한 생산력 증대로 농업의 기업가적 경영이 확대되었고, 토지의 사유화가 크게 진행되어 개인의 소유권이 확립되어 가면서 광범위한 토지집적과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sup>43)</sup>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은 조선후기의 인구증가가 토지에 대한 농민의 압박을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생산성의 증가는 설혹 존재하였더라도 인구증가의 반작용에 거의 상쇄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증가는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아니라 토지생산성의 증가를 주축으로 한 것이었다.<sup>44)</sup>

네째, '국가지배력'에 대해 두 입장은 매우 대조적인 위치에 있다. 우선, '봉건제론'은 조선사회에서 국가를 설명하는데 난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독자적인 행위자로 상정되지 못하고 민간사회의 완전한 지배와 규정하에 놓이게 됨으로서 동양사회적 특수성 - 지배의 정치적 관계가 생산의 경제적 관계에 근원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동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 이 간과된다. 조선사회를 두고 때때로 '국가봉건제'<sup>45)</sup>라는 일견 모순적인 개념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은 동양사회에 존재하는 국가와 민간사회부문의 독특한 제도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국가의 생산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침투와 조절의 능력이 맑스로 하여금 새로운 개념화를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생산양식론의 한계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라고 벗어날 수는 없다. 이 개념은 동양사회에서의 정치적 관계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상부구조가 생산을 둘러싼 경제적 관계로 환원하게 됨으로서 지배의 정치적 관계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논리적 가능성은 상실되고 만다. 국가의 강한 규정력이 끝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

---

43. 김용섭, 1971(1990). 『조선후기 농업사연구』

44. 이영훈, 1988a.

45. 봉건제의 고유한 특성이 분권적인 '장원경제'에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봉건제'는 봉건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로는 내재적인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붕괴되고 외부로부터의 이식에 의하여 새로운 생산관계가 형성될 뿐이다. 생산양식의 이식과 그에 상응하는 단절이 있을 뿐이며 전자본주의와 근대의 역사적 연속성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서는 실종되고 만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사회의 제도적 특성인 강한 국가는 그 근원을 파악하기 힘들어지고 만다.

국가의 인구변동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이 이루어졌다. 환곡 등의 진휼사업을 통해서 사망의 조절이 이루어졌다. 사망력을 주요한 변동원으로 삼는 전자본주의사회의 인구변동에서 국가의 개입은 그 조절과 통제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변인 \ 입장	봉건사회론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조선후기 인구증가	생산력 증가가 인구 증가를 능가	생산력의 증가를 인구증가가 상쇄시킴
사적 소유권 (특히 토지)	완전한 사적소유권의 행사	조세권으로 발현되는 국가의 상급소유권이 중요
도시(화)	조선후기에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있었다. 도시 상공업의 두드러진 발전	도시는 단순한 행정기능을 담당하였다. 미약한 도시인구 증가
계급(관계)	지주와 농민의 계급갈등이 계속 확대됨. 봉건제 붕괴의 한 원인	지주-농민의 갈등은 미약하다. 오히려 계급구분이 없는 '농민일반'과 국가의 대립.
주요 갈등관계	지주 대 농민	국가 대 농민일반
국가 하부구조력	약한 국가	강한 국가
상업화	상업화의 진전 봉건제 붕괴의 한 요인	미미한 상업화 수준 생계를 위한 교환에 불과

< 표2 > 조선사회에 대한 '봉건사회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입장 비교

#### IV. 17~19세기 조선사회의 인구변동과 사회변동

##### 1. 인구변동의 추정

앞의 모델에 비추어 볼 때, 이 절은 외생변수인 인구변화의 실제상황을 추적하는 작업에 해당된다.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구체적인 인구변화의 추세를 확인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인구변동을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자료의 불충분은 물론이고 현존하는 자료라 하더라도 그 완전성이 극히 의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자료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새롭게 자료를 해석하고 인구를 추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진다. 인구를 추정하는 연구로는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sup>46)</sup>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선시대 도시의 인구추정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이 있다.<sup>47)</sup>

조선시대의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왕조의 공식기록인 『朝鮮王朝實錄』<sup>48)</sup>과 정조 때 간행된 『戶口總數』<sup>49)</sup> 그리고 『度支志』<sup>50)</sup>를 들 수 있다. 그러

---

46. 두 편의 논문: ①권태환·신용하, 1977,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일 시론」, 『동아문화』 제14집,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②이영구·이호철, 1987 & 1988,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추계 (I) & (II)」, 『경영사학』 제 2집·제 3집. 그 외에도 몇 편의 논문이 더 있으나 본격적인 추정작업은 위 두 편에 불과하다.

47. 김두섭, 1990, 「조선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24집 여름호. & 김두섭, 1992, 「조선시대 한성부인구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26집 겨울호. & 조성윤, 1994,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증가와 공간구조의 변화」,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43집.

48. 왕조실록 각 권의 마지막 부분에 호구와 인구수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49. 『호구총수』는 정조 때 간행된 것으로서 태조 4년(1395)부터 정조 13년(1789)까지의 各式年(子卯午酉年)의 호구수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인구에 대한 왕조의 공식기록 책자로서 유일한 것이다.

50. 탁지지(度支志): 정조 때 간행됨.

나 이들 자료들은 근대적 인구센서스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된 조사가 아니라 전자본주의적 방식<sup>51)</sup>으로 수행되었으며 세금의 징수와 요역의 부과를 위하여 성인 남녀인구를 중심으로 조사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불충분한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조선총독부자료<sup>52)</sup>와 간이국세조사자료<sup>53)</sup>를 활용하여 새로운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sup>54)</sup>.

전반적인 인구추정을 다루고 있는 두 편의 논문으로부터 출발하자. 조선후기 전체인구의 추정과 관련하여 호구총수와 왕조실록에 실린 자료와 권태환·신용하 그리고 이영구·이호철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연 대	조사 호구수	전체조사인구	자료출처
1639년 (인조17)	441,827	1,521,165	호구총수
1660년 (현종 1)	758,417	2,479,658	호구총수
1675년 (숙종 1)	1,250,298	4,725,704	호구총수
1690년 (숙종16)	1,514,000	6,952,907	호구총수
1720년 (숙종47)	1,559,488	6,799,097	호구총수
1750년 (영조26)	1,783,044	7,328,867	호구총수
1780년 (정조 4)	1,714,550	7,228,076	호구총수
1810년 (순조10)	1,761,887	7,583,046	조선왕조실록
1840년 (헌종 6)	1,560,774	6,617,997	조선왕조실록
1860년 (철종12)	1,589,038	6,748,138	조선왕조실록

51. 당시의 호적은 출생, 사망, 이동의 각 시점에서 파악된 것이 아니라 매 3년(式年)별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호구자료는 각 지역의 자료를 모아 연말에 국왕에게 보고된 것이 사관에 의해 취합,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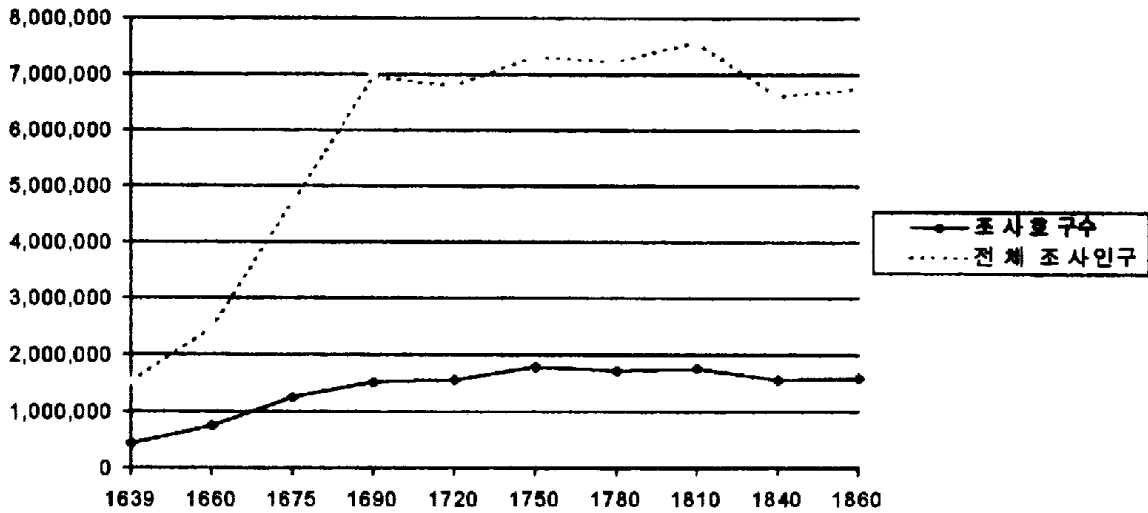
52.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09 & 1910년에 실린 인구자료, 그리고 『民籍統計表』, 隆熙4年, 內部警務局編纂

53. 1925년에 처음 실시된 간이국세조사는 근대적 센서스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에 의해 조사의 완전도가 인정되고 있다.

54. 일단 1925년 '간이국세조사'자료의 완전성을 상정하면 그 후 몇 번에 걸친 간이국세조사자료를 통해서 조선사회의 대체적인 인구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호구총수』와 같은 기존의 왕조자료가 실제의 인구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계산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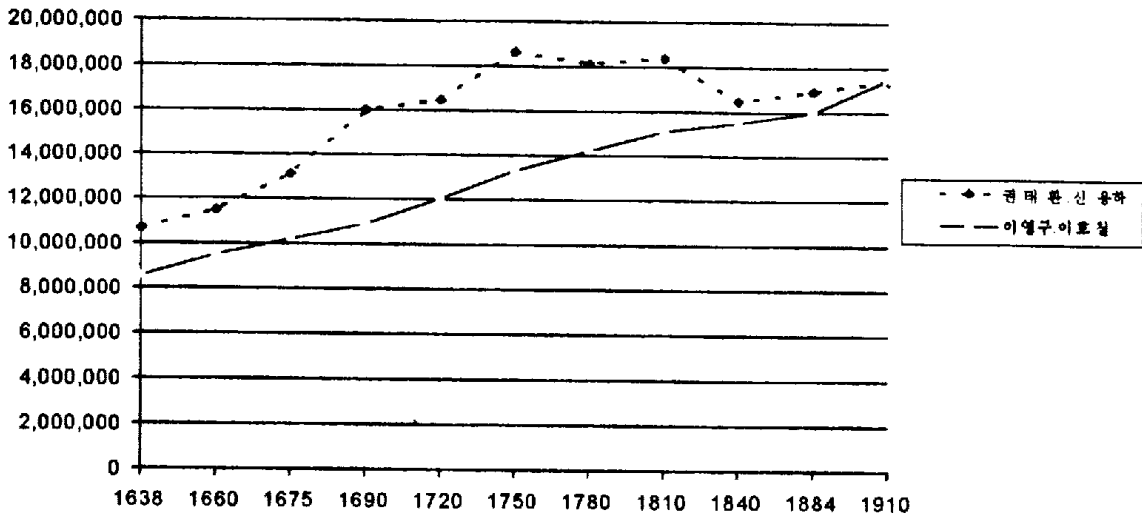
< 표3 > 『호구총수』와 『조선왕조실록』의 호구와 인구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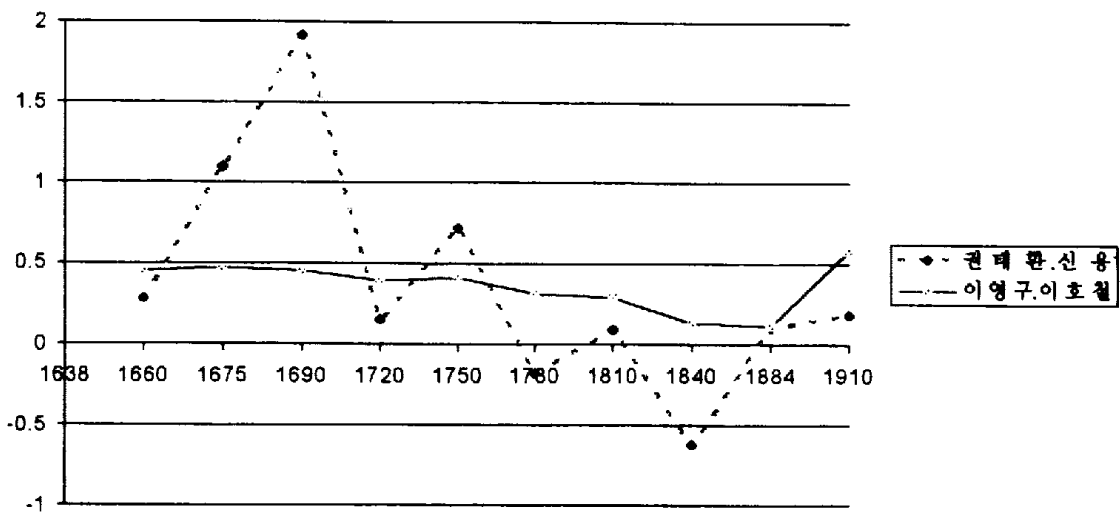
< 그림6 > 『호구총수』와 『조선왕조실록』의 호구와 인구자료

연도	연구자 권태환·신용하	인구증가율 (연평균)	이영구·이호철	인구증가율 (연평균)
1639	10,665,000		8,537,000	
1660	11,488,000	0.28	9,484,000	0.45
1675	13,145,000	1.10	10,193,000	0.47
1690	16,026,000	1.92	10,876,000	0.45
1720	16,487,000	0.15	12,050,000	0.39
1750	18,657,000	0.72	13,301,000	0.41
1780	18,126,000	-0.18	14,232,000	0.31
1810	18,383,000	0.09	15,100,000	0.29
1840	16,503,000	-0.62	15,501,000	0.13
1884	16,950,000	0.1	16,000,000	0.11
1910	17,427,000	0.18	17,500,000	0.58

< 표4 > 조선후기 인구에 대한 두 추정치<sup>55)</sup>



< 그림7 > 조선후기 인구에 대한 두 추정치: 총인구



< 그림8 > 조선후기 인구에 대한 두 추정치: 인구증가율

55. <표3>과 <표4>는 권·신의 매년 추정치를 연속적으로 볼 때 그 흐름(등락)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30년을 단위로 삼았다. 처음의 두 간격이 30년에 미달하는 것은 급중한 인구변화 - 혹은 파악 - 의 흐름을 살리려 했기 때문이다. 각 표의 마지막 구간 간격이 30년이 아닌 것은 구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이며 1910년을 끝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위의 두 추정치는 모두 왕조실록의 자료와 호구총수를 기본자료로 삼고 있지만 실제 수치에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권·신의 연구에서는 17세기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인구가 19세기 초(1811)<sup>56)</sup>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는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18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후 1910년까지의 인구증가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이의 추정치는 임진왜란 이후 큰 굴곡없이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1884~1910)의 인구증가율은 0.34%에 이르고 있어서 권·신의 추정치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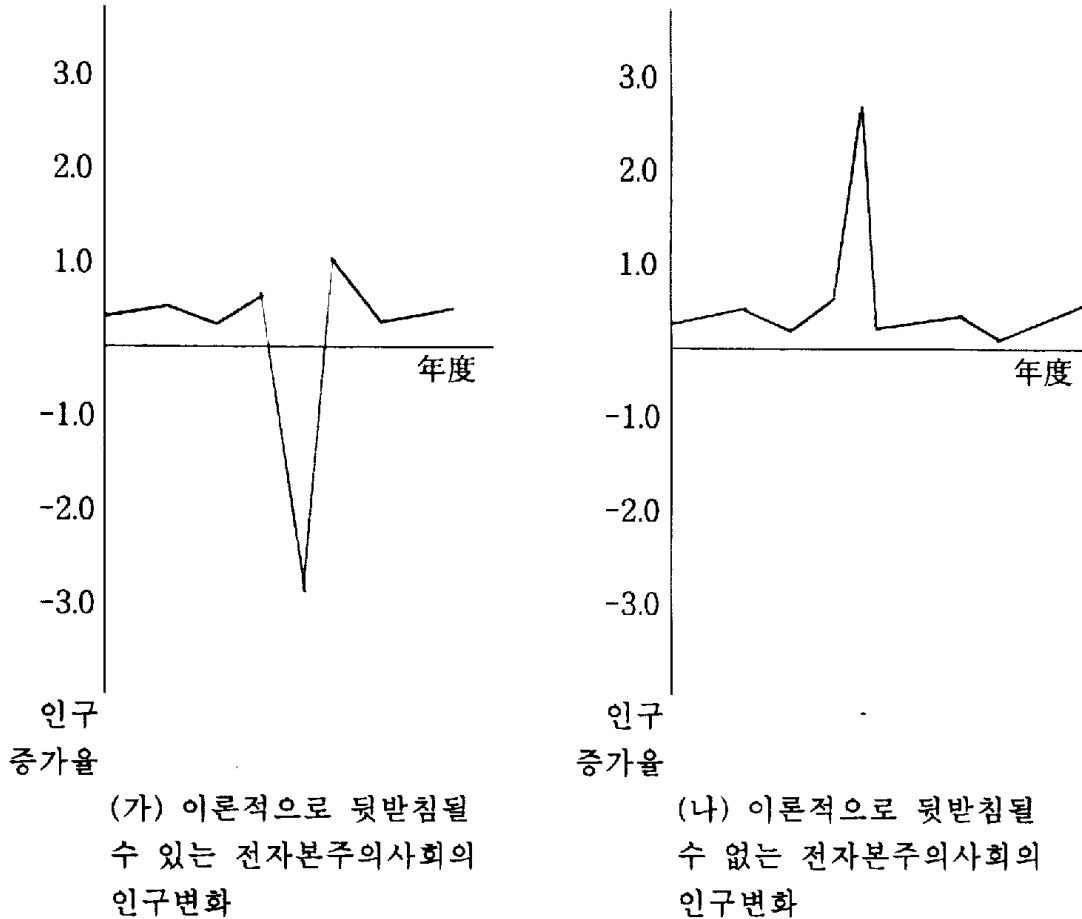
권·신의 추정결과는 위의 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증가율이 크게 굴곡을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띄인다. 전자본주의 사회의 인구변동이 사망력의 증감에 크게 좌우되어 넓은 변화 폭을 나타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들쭉날쭉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지나치게 그 굴곡이 강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의 <표4>에서 각 구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망력의 변화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결정된다면 어느 정도로 낮은 인구성장률을 기본으로 하여 기근 혹은 전쟁의 발생에 따라 간혹 낮은 인구증가율(혹은 감소율)이 기록되어야 할 것이지만 오히려 1675~90 사이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예외적으로 기록되고 있고 다른 기간의 인구증가율은 고저 등락을 교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연령구조가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본주의사회에서 단기적인 인구변화는 사망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출산력에 의한 인구증가의 최대치는 인구 1000명당 50에 불과하다. 보통은 15~50/1000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사망력에 의한 변화(감소)의 폭은 그보다 8배까지 클 수 있다. 전자본주의사회에서 자연재해에 따라 사망력은 400/1000에 이르기도 한다.<sup>57)</sup> 출산력을 육조에 떨어지는 몇 방울 수도물에 견줄수 있다면 사망력은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56. 보다 자세한 인구변화 추정치를 위해서는 권·신, 1977의 附表를 참고할 것.

57. E. A. Wrigley, 1969. 62쪽

물의 흐름에 비견된다. 따라서 <그림9> 의 (나)와 같이 높은 인구증가율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구변화는 이론적으로 지지되기 어렵다.



< 그림9 > 전자본주의사회의 인구증가율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구성

이·이의 연구에 따르면 권·신의 추정치는 조선전기(임진왜란 전까지)의 인구를 너무 높게 잡음으로써 18, 19세기의 인구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추론을 내리고 말았다. 권·신은 조선전기(1392~1592)의 인구증가율을 0.469%로, 후기는 0.175%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들은 전자본주의사회의 인구변화에서 감소는 일시적으로만 나타난다는 전제를 수용할 때 후기의 인구증가를 지나치게 낮게, 그리고 전기의 증가를 지나치게 높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18, 19세기

의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는 추정은 전자본주의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점차 증가해 가는 일반적인 현상과 비교해 볼 때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sup>58)</sup>

1910년의 인구를 1750만으로 잡는데 동의하고 조선전기의 인구증가율이 후기의 인구증가율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할 경우, 조선후기의 출발점인 17세기 초(1639년)의 인구는 850만명 정도에 그쳤을 것이라는 이·이의 연구가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결국 변화의 전체적인 양상을 추정함에 있어 권·신의 연구가 『호구총수』의 인구변화추세 파악이 가지는 완전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사회의 인구자료를 고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인구파악의 '목적'과 그것의 역사적 변화이다. 조선시대에 행해진 국가적 조사사업 - 量田사업과 호구조사사업 - 은 목적이 국가의 수입원 파악과 역(役)의 부과에 있는 것이지 결코 인구 혹은 전답의 완전한 파악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뚜렷한 예로 인구파악의 경우 역의 부담이 없는 유아인구의 파악률은 다른 인구층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sup>59)</sup> 그리고 조선초에 경기도가 양전사업의 조사대상에서 빠졌었다는 사실은 경기도 지역의 수조권이 양반에게 분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수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는 이유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sup>60)</sup>

---

58. 전자본주의사회에서 인구증가와 절대생산량의 증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기와 비교하여 조선후기에 생산력의 증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 이호철은 조선전기와 비교하여 후기의 절대생산력 증대가 약 1.5배에 달한다고 분석한다. 이호철, 1986, 『조선전기농업경제사』 746-747쪽의 표 참고.

59. 특정지역의 전래자료와 근대적 센서스에 의한 자료를 비교분석한 은기수의 논문에 따르면 인구기록의 완전성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61세 이상이며 자료의 충실성이 가장 높은 층은 46-60세 층이다. 1-15세 연령층은 기록이 가장 부실한 연령층으로 볼 수 있다. 은기수, 1987, 『조선조 인구 및 신분연구자료로서의 호적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29쪽

60. 파전법의 실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은 관료의 수조지(私田)로 분급되었다가 관수관급제(성종)의 실시로 다시 회수되었다. .

한편, 조사성격의 역사적 변화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수입과 각종 역(力役)과 공부(貢賦)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였던 호구조사의 경우, 조선전기에는 호를 단위로 하여 통제되었다.<sup>61)</sup>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수세제도는 도결제와 금납화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sup>62)</sup> 많은 역(役)이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형식<sup>63)</sup>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취과정에서 호의 중요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 즉, 종래에 '조(調)'로서 가호(家戶)에 부과되던 공부와 부역노동이 '조(租)'로 전환되어 지세화(地稅化) 하였고, 따라서 호의 파악이 갖는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가 아래의 표와 같이 '호구수의 정체-인구수의 증가'라는 기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구분 \ 연도		1750	1792	19세기 초	1871	1895	1911
		戶	2,725	2,502	2,501	2,501	1,968
口	남	4,926	5,248	5,246	5,246		10,671
	여	5,121	4,926	4,925	4,925		9,640
	計	10,047	10,174	10,171	10,171	12,891	20,311

< 표5 > 조선후기 연기군의 시기별 戶·口總 추이<sup>64)</sup>

한 지역의 시대적 인구변화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표5>는 인구성장의 정체

61. 조선초의 경우 호구는 실제하는 호 전체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한 노동력의 징발을 위해 조정된 편호(編戶)로 인정된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 자연호(自然戶)의 파악이 중심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조성윤, 1994. 106쪽)

62. 정진영, 1991. 291-293쪽

63. 조선후기 들어 예전에 민호(民戶) 혹은 호내(戶內)의 특정인에게 부과하던 공물, 진상, 그리고 부역노동이 대동과 결작이라는 세목으로 토지에 부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설된 삼수미(三手米), 서량미(西糧米), 포량미(砲糧米)가 모두 결역(結役)으로서 토지에 부과되었다. (김옥근, 1984. 239쪽)

64. 이영훈, 1990년, 「광무양전에 있어서 시주파악의 실상」,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서울. 95쪽에서 인용. 원래 각 수치는 1750년 『輿地圖書』, 1792년 『戶口總數』, 19세기 초 『忠淸道邑誌』, 1871년 『湖西邑誌』, 1895년 『地方制度調査』, 1911년 『朝鮮總督府統計年譜』에서 찾은 것이다.

라는 표면적 현실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에 따르면 연기군의 호총은 18세기 중반 이후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895년에는 오히려 500여호 가량 - 전체 호의 약 1/5 -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총은 오히려 3,000 명 - 전체인구의 약 30% -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호구수가 '조사의 완전성' 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세금징수를 위하여 각 지역에 할당된 정도 - 호총(戶總)과 구총(口總) - 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sup>65)</sup> 또한 조선전기의 세금수취가 주호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납의 방법이었던데 비해 후기로 가면서 호의 파악과는 분리된 형태, '도결제' 혹은 '금납제'로 바뀌어갔다는 점도 호의 파악이 부실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호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증가가 기록된 것을 볼 때 18, 19세기에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는 주장은 '호구총수'의 자료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일부 자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8, 19세기에 인구의 감소를 낳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했다는 사실<sup>66)</sup>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가 조선전기에는 인구증가를 상쇄하지 못했는데 유독 후기에만 그러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조사의 불완전성을 감안한다면 전체규모 면에서 18, 19세기를 통틀어 꾸준한 인구증가 - 1690년부터 1910년까지 670만 명 정도의 인구증가분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60% 이상의 증가 - 가 있었다는 이·이의 추정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

## 2. 인구증가와 인구이동 - 도시인구에 대한 평가

65. 다산은 '백성들을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 관리들이 호총과 호액을 늘리지 말고 이전의 호총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역주 목민심서Ⅲ』 90쪽) 이를 통해 미루어 보건대 호구의 공식적인 기록은 실제 증가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었다.

66. 18, 19세기 인구자료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인구감소의 요인 - 자연재해, 질병, 전쟁 등 - 에 대해서는 권·신의 논문 부록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권·신, 1977.

인구증가와 더불어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구의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문에 흡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확인하는 기본작업이다. 인구이동은 당시 기술수준과 계급관계, 상업의 발전 등에 따라 유발되기 때문에 앞에 제시한 여러 모델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서 농업노동력의 분해와 도시상공업의 발전에 따라 인구의 도시유입이 이루어졌다면 상업화모델이 지지될 수 있고, 다른 산업부문의 노동력흡수가 불가능하여 농업부문으로의 인구가 집중되었다면 신맬더스모델에 부합하는 지표로 파악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인구이동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가능한 방법은 『호구총수』에 수록된 각 지역별 - 道, 郡, 面 - 인구의 시대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인데,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인구는 1789(정조 13년)자료가 유일하다.<sup>67)</sup> 따라서 여기서는 호구총수의 지역별 인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시대적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일제시대의 도시인구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려 한다.

김두섭은 호구총수의 1789년 각 지역별 인구를 분석하여 도시인구의 윤곽을 밝혔다.<sup>68)</sup> 그는 일천호 이상의 지역을 도시로 규정하여 57개의 도시지역<sup>69)</sup>을 구성하였다. 호구총수에 나타난 도시의 호수와 인구수는 각각 146,121호와 594,964명으로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의 8.34%와 8.04%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자료의 불완전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정작업을 거쳐야 한다. 김두섭은 근대 센서스자료의 '호당 인구수'와 '남녀구성비'<sup>70)</sup>를 근거로

67. 정조때 간행된 『호구총수』는 태조때 부터 정조때 까지의 각 도별 인구총수를 수록하고 있고, 1789년에 한해서만 도·군·면별 인구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68. 김두섭, 1990. 「조선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 24집, 여름호

69. 김두섭은 천호 이상의 지역을 도시로 구분하였는데,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천호 이상의 지역도 도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된다. 즉, 호구총수의 지역구분이 도시와 농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세밀한 것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 예로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따르면 천호 이상의 도시부는 1907년에 30, 1908년에 36곳에 불과했다.(『統監府 統計年報』)

70. 호당 인구수를 센서스자료의 5.3으로 조정하는 것은 호구총수의 자료가 가진 호구 내부파악의 불완전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1925년의 '간이국세조사' 결과에 따



하여 자료를 수정한 결과 아래 <표6>의 (C), (D)항목에 해당하는 수치를 얻어냈다.

추정된 전국의 호구수는 1789년 한성의 가구수가 거의 완전히 파악되었기 때문에<sup>71)</sup>, 1925년의 자료에서 ‘한성:전국’의 인구비율인 1.3%를 1789년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1789년 전국의 인구수는 호구수에 5.3을 곱하여 얻었다. 도시지역의 인구에 대한 추정은 호구총수의 자료를 기준으로 각 도시의 가구당 평균인원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얻은 것이다. 평균 가구원 수가 5.3명에 이르는 경우는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호수에 5.3을 곱하여 수정치를 얻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호구수는 따로 추정하지 않았다.<sup>72)</sup>

추정된 수치는 센서스자료의 호당 인구에 기준하여 수정되었기 때문에 보다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호구총수』의 기재수치와 김두섭의 추정수치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1789년의 조선 도시인구의 비율은 대개 5~8% 사이에 놓여졌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르면 조선사회의 호당 인구수는 5.3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녀비율과 관련하여 여자 100명당 남자의 비율이 80-110 사이에 놓여 있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조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였다. 정상적인 전 근대사회에서 남녀 비율이 80-110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두섭, 위 글을 참조할 것.

71. 다른 지역과 달리 한성에서 누락된 가구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된다. 한성부는 중앙관청으로 전국의 호구조사를 총괄하고 그 결과를 이송받아 정리, 보관하였다. (김두섭, 1992. 73쪽)

72. 김두섭은 도시인구의 추정에서 전국인구의 추정과 달리 ‘호’ 파악의 완전성을 암묵적으로 상정하여 도시호수의 추정을 하지 않았다. 도시에서의 호 파악이 농촌 지역 보다 완전도가 높을 것은 기대할 수 있지만 인구파악의 완성도를 어느정도 수궁할 수 있는 한성의 경우와 달리 전체도시의 호수 파악은 여전히 부분적인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자료 지역	호구총수 기재호수 (A)	호구총수 기재인구 (B)	호당 인구 (B/A)	김두섭의 추정호수 (C)	김두섭의 추정인구 (D)	호당 인구 (D/C)
57개 도시	146,121	594,964	4.07	추정치 없음	872,794	
전국	1,752,837	7,403,606	4.22	3,379,154	17,977,098	5.32
도시/전국	8.34%	8.04%			4.86%	

< 표6 > 1789년의 도시인구비율에 대한 추정

그렇다면 그 후 100여년간 - 일제의 영향으로 산업화, 도시화된 부분을 제외하고서 - 인구의 도시이동은 얼마나 진행되었을까? 이것 또한 기존의 자료에 대한 수정작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1789년의 경우와 같이 호구수 천명 이상의 지역에 해당하는 인구를 실제로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표와 나타난 자료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행해진 인구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가능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1908년에 발행된 『통감부통계연보』<sup>73)</sup>는 간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주요시가지'<sup>74)</sup>인구자료'에서 호수 1,000 이상의 도시호수와 인구를 파악할 수 있다. 1,000 이상의 호구를 가진 도시는 전국에 걸쳐 36곳<sup>75)</sup>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호수는 15만 3천여호에 달한다. 이것을 역시 같은 자료에서 조사된 전국호구,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호수는 약 6.57%, 인구는 6.2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 역시 근대적 센서스자료 - 1925년의 간이국세조사자료 - 와

73. 『第三次 統監府統計年報』, 1908

74. 이때 '시가지'가 어떤 경계를 포함하는 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시가지'가 상업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한성의 경우 행정구역 상의 인구와 시가지 인구가 동일(160,843명)하다. 다른 도시도 행정구역상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인구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3차 통감부통계연보』

75. 36개 도시의 이름, 인구, 호구수는 이 논문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앞의 호구총수와 마찬가지로 호당 인구라는 기준을 두고 보면 국세조사를 통해 확인된 5.3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호수(A)에 5.3을 곱해서 나온 812,506을 수정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또는 권·신과 이·이의 추정에서 합의된 대로 전체인구를 1750만 명으로 잡으면 이 자료의 완전성을 약 55.9%로 잡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도시의 인구수도 1,095,181<sup>76)</sup>로 수정된다. 전체인구에서는 1750만 명을 적당한 추정치로 삼을 수 있으므로 역시 호당 인구 5.3으로 나누어주면 전국의 호수는 약 330만에 이른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 결과 우리는 1908년에 조선의 도시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약 5~7%에 이를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는다.

자료 지역	호수 (A)	인구 (B)	호당인구 (B/A)	수정 호수 (C)	수정인구 (D)	호당인구 (D/C)
36개 도시	153,303	612,206	3.99	A와 같음	812,506	5.3
전국	2,333,087	9,781,671	4.19	3,301,887	17,500,000	5.3
도시/전국	6.57%	6.26%			4.64%	

< 표7 > 1908년의 도시인구 비율<sup>77)</sup>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만 <표6>과 <표7>을 통해서 조선 후기 도시인구의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1908년은 미곡의 상품화와 일본수출로 인하여 개항 이후 항구도시의 성장이 이미 진행된 시기였고, 그래서 실제 조선사회의 내부동력에 의한 도시화의 진행은 <표7>에

76.  $612,206 : X = 55.9 : 100$  이 식으로부터 X(도시인구)는 1,095,181명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도시인구의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은 전체인구도 같은 비율로 증가함으로 역시 6.26%에 불과하게 된다.

77. 1908년 자료에서 도시호구파악의 완전도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36개 도시의 호구수는 추정하지 않았다. 만약 도시호구파악의 완전도를 전국자료와 같은 수준(55.9%)으로 파악하면 수정호구수와 인구수가 같은 가중치를 가지게 되므로 도시/전국 비율은 원자료와 같은 6.57%로 복귀하게 되어 수정치의 의미가 상실된다.

제시된 것의 일부분에 불과했을 것이다. 또, 1908년의 자료는 도시에서 일본인의 활동과 그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도시부문의 정확도<sup>78)</sup>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조선사회의 '내부동력에 의한 도시화의 진행'<sup>79)</sup>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체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정도의 도시인구유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정하기 힘들다.

그리고 16~19세기에 걸친 절대인구증가와 20세기 초의 도시인구규모를 비교해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789년 자료의 한계 - 도시의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인구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 - 를 인정하더라도 도시인구의 절대증가가 너무 미약하다. 권·신, 이·이의 추정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16~19세기 전체인구 증가는 800~1000만에 육박하는데 20세기 초반(1908)의 전체도시 인구는 최대한 109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개항이후 증가된 인구<sup>80)</sup>를 제외한다면 실제 16~19세기 동안 증가된 도시인구는 30%인 35만명을 초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도시의 확대가 미약했다는 사실은 조선의 도시가 기본적으로 행정과 지배를 위한 도시였다는 기본적인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상업활동의 거점으로, 그리고 봉건적인 지배의 탈출구로 기능하였던 서구의 도시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sup>81)</sup> 도시는 지배의 거점으로 행정기능이 중심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과 성장은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

78. 통감부자료는 도시의 일본인 비율, 그리고 무역, 교통 등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79. 도시인구증가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농촌노동력이 반강제적으로 이출된 것인지 혹은 도시가 인구를 유인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도시의 인구증가가 존재하였더라도 유인조건(pull factor)보다 이출조건(push factor)에 의한 것이라면 상업화모델의 진화론적 발전론은 적용될 수 없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 조건들은 논문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다.

80. 이 논문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08년 자료에서는 인천, 부산, 군산, 목포, 원산 등 개항 이후 급성장한 도시들의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81. 서구도시의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전성우, 1986, 「막스베버의 근대자본주의 발생론 I」, 『한국사회학』 제20집 여름호

었다.

### 3. 인구학적 변인과 농업구조의 변화

인구의 증가, 혹은 동일한 의미인 '노동력의 양적확대'는 농업을 대부분으로 하는 당시의 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까? 이 절에서는 농업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하자. 먼저 변화의 양상을 이론적으로 구성해 본다. 인구의 증가와 농업부문의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II장의 상업화모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의 증가와 충분한 농업생산력의 증대가 결합하여 농업부문의 계층분화를 유발하고 농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잉여노동력이 도시부문으로 유입되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상공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도시의 상공업적 발전을 주도하였다. 농업의 발전과 그 잉여에 기초한 봉건제의 해체와 자본제의 성립이라는 전체적인 틀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시각이다.

둘째는 앞의 新맬더스모델을 지지하는 시각이다. 농촌에서 발생한 인구의 증가가 대부분 전통적인 농업부문에 남아있으면서 농업은 더욱 노동집약적으로 발전하고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하락되어 간다. 농업생산량의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노동생산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인구의 증가는 맬더스적 반동을 가져올 것이지만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그 선에 도달하는 것은 연기 혹은 유보될 수 있다.

앞의 두 절을 통해서 조선후기에 인구의 꾸준한 증가, 그리고 미약한 도시성장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인구의 증가분은 대부분 농촌의 전통적인 산업부문으로 흡수되어 갔을 것이라는 추정을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으며 위의 두번째 입장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농촌에서 인구의 증가는 농업구조의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을까? 이론적으로 노동력의 증대는 기술의 발전보다는 많은 노동력의 투입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이루게 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주변에서 손쉽게 유희노동력을 값싸게 얻을 수 있다면 굳이 투자를 통해 기술발전 - 경제발전 - 을 성취할 필요가 없는 기술발전은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오는 특성이 있다 - 을 성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술발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끊임없는 혁신'의 필요성과 시행착오(trial and error)의 되풀이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인구과밀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의 발전이 노동절감형이 아닌 단지 집약적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의 형태를 띤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투자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노동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82)</sup>

손쉽게 노동력을 발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유희노동의 투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의 증대가 기술발전을 위한 투자 - 단기적으로는 항상 손해 - 의 손실계산을 뛰어넘는 것이 보통이다. 노동절감형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기술발전의 전망과 효과가 투자비용을 뛰어넘는다는 확신이 형성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노동력을 주변에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술발전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편 농업 이외의 고용이 제한된 곳에서는 앞의 조건이 더욱 강화된다. 도시상공업의 발전이 미약한 경우 농촌의 증가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은 전통적인 농업생산부문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노동의 비용은 더욱 싸게 되므로 기술발전을 위한 투자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진다.

17~19세기 조선사회의 인구와 기술발전의 관계도 위의 틀을 따르고 있다고

---

82. 전근대사회에서 중국과 유럽의 경제발전을 비교하는 경우에 인구와 기술발전의 관계에 대한 위의 논리는 쉽게 적용될 수 있다. 14세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중국의 산업화가 좌절된 이유 - 니담의 수수께끼(the Needham puzzle) - 에 대한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Anthony M. Tang, 1979, "China's Agricultural Leg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그리고 Justin Yifu Lin, 1995, "The Needham Puzzle: Why the Industrial Revolution Did Not Originate in Chin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3 No. 2.

판단된다. 그 조건으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경지면적의 현상유지'이다. 조선의 실학자들에 따르면 조선시대 전국의 전결(田結)수는 임진왜란 이전에 152만 결에 이르렀다가 임란 직후 100만결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 후 19세기 말까지 140~150만결 수준을 다시 회복하였다.<sup>83)</sup> 『택리지』와 『만기요람』의 통계치를 보더라도 1784년의 전결수가 147만여결, 1807년에는 145만여결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sup>84)</sup>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의 인구차이 - 증가 - 가 1.6~2.0배<sup>85)</sup>에 달했던 것을 감안할 때 늘어나지 않은 경작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구압력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은결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경작토지의 면적이 2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소작농민의 빈번한 교체' 역시 인구의 압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구의 구성 비율로 볼 때 19세기에 소작농민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각 계층별로 같은 비율의 인구증가를 경험했다는 가정을 한다면 소작농민의 인구압력과 토지에 대한 경쟁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몇 배에 달했을 것이다. 그에 비례하는 만큼의 '주변인구(marginal population)'<sup>86)</sup>가 사회적 압력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그들의 향방은 소작지의 과다노동력투입 혹은 유민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한 예로 1892~1904년 동안 경상남도 가락면과 활천면의 필지당 작인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전자본주의 농촌사회의 경우로는 매우 짧게도 평균 경작기간이 7.6년에 불과하였다.<sup>87)</sup>

83. 박상태, 1987. 107쪽의 표2

84. 조성윤, 1988에서 인용. 이 수치가 은결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은결의 여부는 감안하지 않았다.

85. 권·신의 추정에 따르면 약 800만명(1000만 → 1800만), 이·이의 추정에 따르면 약 600만명(1000만 → 1600만)의 인구증가가 기록되었다.

86. 주변인구는 경제적 재생산 수단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지 못한 구성원들이며 이들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전근대사회에서 전체인구에 대한 주변인구의 구성비에 따라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안요소는 달라진다. J. Goldstone, *Revolution and Rebellion in the Early Modern World*, 33쪽

87. 이영훈, 같은 글. 466쪽의 표10을 참고함. 단, 이 지역은 장토(庄土)였으므로 전국의 경작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궁방전, 아문

농업의 변화가 노동집약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고 있었는가 혹은 자본집약적이고 토지집약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일인당 경지면적에 따른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영훈은 20세기 초반, 경상도의 농업통계자료<sup>88)</sup>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의 규모에 따른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8>에서 보듯이, 일인당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모두가 상승하고 있다.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일인당 경지면적
16.78圓	16.27圓	0.97段步
14.82	17.89	1.21
12.57	17.67	1.39
10.76	14.02	1.30
8.82	12.70	1.44
7.08	12.21	1.70

< 표8 > 토지생산성의 상승과 노동생산성, 일인당 경지면적의 추이<sup>89)</sup>

이것은 당시의 농업이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의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적 농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동력을 최대한 소비하는 노동집약적인 형태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리고 실제 노동집약적인 형태가 가장 큰 수확 - 높은 토지생산성 - 을 보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농업생산자는 경작면적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호하였을 것이다. 특히 잉여노동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초과

둔전의 면적은 전체 경작지의 10%를 넘지 않았다. (이호철, 1988)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에서도 드러났지만 궁장토는 농민의 소유권이 가장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형태의 토지였다. (배영순, 1987 그리고 이영훈, 1993)

88.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경상도, 전라도)

89. 이영훈, 1986.의 446쪽



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제한의 노동력 투입을 감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이론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위의 표를 통해서 추정할 때 한 사람의 노동력이 최대한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면적은 1.0 단보 안팎일 것이다.

농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농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이호철은 넓은 경작지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조방적농업이 조선초기에 정점을 이루었고, 후기로 가면서 '일인당 경작면적의 축소'와 '노동집약적 농법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농업서인 『농사직설』(1492)과 『금양잡록』에 실린 농법은 다수의 축력에 기반을 둔 노동생산성 중심의 노동절약적, 토지집약적 기술에 근거한 조방농법이었다.<sup>90)</sup> 물론 한편으로 토지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농경영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지극히 낮은 생산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대농법은 축력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기로 접어들면서 그 추세는 역전되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 후반이후 토지를 광점(廣占)한 소지주, 부농층에 의하여 선초의 대농장과는 다른 형태인 '병작경영(竝作經營)'이 활성화되었다. 병작반수(竝作半收)의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주경영의 전개는 이 시대 농민층의 급격한 하향분화의 결과로 빚어진 소농민경영으로의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호당경지면적, 일인당경지면적의 변화는 위의 분석을 뒷받침해 준다.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의 변화를 살펴보면 14세기를 정점으로 인구당 경작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17세기 이후로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세기까지는 광활한 경작지를 기반으로 하는 조방적 농업의 우세를, 그 이후에는 노동집약적 농업의 우세를 확인할 수 있다.<sup>91)</sup>

---

90. 이호철, 1986. 711쪽

91. 현대농업에서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조방적 농업은 노동집약적 농업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지만, 노동절감형의 기술이 부재된 전자본주의농업에서 조방적 경영은 낮은 생산력을 낳을 뿐이다.

구분 시기	실제 경작면적*		경작면적 지수**	
	인구	호	인구	호
신라시대(8~9세기)	26.02	129.50	509.2	503.9
충렬왕 5년(1301)	37.18	185.85	727.6	723.3
세종연간(1432)	7.33	41.57	143.4	161.8
중종38년(1543)	5.11	25.70	100.0	100.0
17세기 전반	5.68	19.03	111.2	74.4
18세기 전반	4.20	17.82	82.2	69.3
18세기 후반	4.17	17.35	81.6	67.5
19세기 전반	4.09	17.54	80.0	68.2

(\*실제경작면적은 '1단보=300평'을 단위로 한 것이다)

(\*\*경작면적 지수는 중종38년의 전국평균 경작면적을 100으로 계산한 것임)

#### < 표9 > 호구당, 일인당 경작면적의 변화<sup>92)</sup>

이렇게 농업의 구조가 바뀐데에는 앞서 이론적으로 점검한 기술발전의 방향 - 노동절감형이 아닌 노동력활용형 기술 - 이 작용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인구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 4. 인구와 국가지배력<sup>93)</sup>

#### 4.1. 인구변동과 국가지배력

92. 이호철, 1986. 742-743쪽

93. 만(Michael Mann)은 국가지배력을 '전제력(despotic power)'과 '하부구조력(infrastructural power)'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전제력은 강압적 지배를 의미하고 하부구조력은 시민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ann, 1988. 5-11쪽). 두 개념은 엄격히 구분되기보다 자본주의사회로 바뀌면서 국가의 하부구조력이 전제력에 비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국가지배력'은 따로 설명되지 않는 한 두 개념의 통합적인 의미로 쓰여진다.

조선사회에서 국가의 지배력은 인구파악 과정에서부터 발휘된다. 교구(parish)단위로 이루어진 서양의 인구파악<sup>94)</sup>과는 달리 조선의 인구파악은 원칙적으로 매 식년(式年)마다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다.<sup>95)</sup> 인구의 파악은 국역(國役)의 확보와 세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민에 대한 지배력을 나타내는 한 측면이었다. 따라서 인구파악의 정도가 높은 경우는 국가의 지배력이 높은 경우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공식적인 인구파악이 전체인구의 약 40-50%<sup>96)</sup>만을 포괄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조선의 국가가 낮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판단은 성급한 것이다. 호구총수의 완전도를 근대적인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완전도가 50%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가 틀림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호구와 인구파악의 원칙과 운영의 의의가 무엇이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호구와 인구의 파악은 양인 남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아인구의 누락은 근대적 조사의 완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인구파악이 가지는 문제점을 근대적 기준에서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둘째, 호구관리의 원칙은 '정확한 수치파악'과 '국역의 적절한 배분'을 통합한 것이었다. 다산에 따르면 호구파악에는 '해법(海法)'과 '관법(寬法)'의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해법은 '호구의 실수(實數)를 파악하기에 힘써 엄한 법으로 단속하는 것'이며, 관법은 '구와 호를 반드시 다 찾지 않고, 그 대강을 잡아 도총(都總)을 파악하여 균등히 되도록 힘써 너그러운 법으로 이끄는 것'이다.<sup>97)</sup> 관리는 두 원칙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원총<sup>98)</sup>을 기본으로 실제의 가감을 감안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

근대국가와 조선왕조의 하부구조력을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동일한 시대의 다

94. 서양에서는 각 교회와 성당의 교구에 기록된 출생(세례)과 혼인, 사망의 기록을 통해 과거의 인구구성을 파악한다. Louis Henry, 1969.

95. "호구총수 해제", 『호구총수』, 1972, 서울대학교출판부

96. 앞 절의 인구추정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97. 『역주 목민심서 III』, 1981, 다산연구회 역주, 창작과 비평. 76-77쪽

98. 각 군현단위로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법제상의 총수

른 국가와 비교하는 작업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전자본주의사회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인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중앙집권적 국가지배의 강인함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의 인구조사는 때때로 구휼작업과 함께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자연재해나 그로 인한 흉년이 든 경우에 국가적인 구휼사업을 벌이게 되고 이때 인구파악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보통 구휼미의 방출 때 이루어지는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보통 때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때 국가의 활동은 인구의 조사뿐만 아니라 인구변동의 과정 자체에 개입하여 인구의 감소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역할도 하였다.<sup>99)</sup>

#### 4.2. 인구압력과 국가지배력의 강화

국가는 물리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이며 그 지리적 범위는 남세자에 대한 강제력이 미치는 범위로 규정된다. 행위자로서 국가는 다음의 두 가지 대립되는 행위지향을 동시에 갖는다. 첫째, 국가는 사회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산권의 확립을 통해서 사회적 차원의 부를 확대시킨다. 둘째, 국가는 자신의 - 지배자 혹은 지배계급의 -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제도를 확립, 존속시킨다.<sup>100)</sup>

위의 두 경향은 언뜻 양립불가능해 보이지만 상황의 전개에 따라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국가의 두 얼굴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국가는 항상 자신의 이익 - 세수입 - 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위한다. 최소한의 규칙제공을 통해서 최소 '거래비용'<sup>101)</sup> - 국가의 입장에서 공공재 및 반공공재의 제공 - 에 최대한의 이익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효율적인 규칙의 제공은 사회전체의 부를 확

---

99. 비슷한 체제인 중국 명나라의 구휼체제가 인구조절에 훌륭한 기능을 수행했다는 연구가 있다. Pierre-Etienne Will, 1988.

100. D. North, 1981. 22-23쪽

101. 국가의 입장에서 거래비용은 공공재 및 반공공재의 제공에 해당된다. D. North, 1981. 26-27쪽

대시키는데 기여하지만 거래비용의 확대를 동반하여 국가의 수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종종 독점을 묵인하는 정책을 쓰게 된다. 역사를 통틀어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비효율적 재산권의 확립은 경제발전의 제약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에 경쟁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수탈에 대한 피지배자의 반발 때문에 효율적인 재산권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결국 '민간사회(civil society)<sup>102)</sup>'를 구성하는 각 계급의 국가에 대한 협상력이 증대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외부의 경쟁자가 존재하는 경우 - 다른 국가 혹은 그 사회내부의 다른 권력집단 - 에 효율적인 재산권의 확립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sup>103)</sup>

조선후기의 인구증가와 농업구조의 변화는 각 계급의 협상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농민은 인구의 증가와 제한된 경지면적으로 인하여 對 지주협상력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다.<sup>104)</sup> 짧은 경작기간과 노동집약적 농업화는 그 결과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양반지주의 경우도 인구의 증가로 계급의 힘이 증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105)</sup> 조선전기에 대농장을 경영하던 관료지주층은 임진왜란을 거쳐 후기로 넘어오면서 발전된 생산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던 새로운 계층의 성장에 따라 자신의 지배력이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인구증가-농업의 노동집약화'의 여파는 계급관계에서 농민층의 양극분해와 새로운 지주계급의 성장으로 나타났다. 조선초에 형성되었으며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많은 수의 자작농은 조방적 농업의 낮은 생산력 때문에 자립적인 기초를 확보하지 못하고 소작농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한편에서

---

102.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시민사회'로 불리지만 동양의 전자본주의사회에서는 '민간사회'로 부를 수 있다. 물론 동양에 '민간사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Huang, 1993), 여기서는 기존의 논의(Hagen Koo, 1993)에 따라 한국전자본주의사회를 국가와 민간사회로 구분한다.

103. D. North, 1981. 27쪽

104. 한 경지에 대한 농민의 경작기간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앞 절의 '경작기간'에 대한 논의를 참고 할 것.

105. 새로운 지주계층의 성장으로 내부분화가 발생하여 사족지배는 흔들리게 되었다. (정진영, 1991)

는 조방적 농업의 핵심이었던 양반지주의 대농장이 노동집약적인 방법에 우위를 내주면서 새로운 경영의 등장이 예고되었다. 소작농민과의 병작반수를 특징으로 하는 병작제는 사족을 대신할 새로운 지주계급의 성장기반이 되었다.

신향(新鄕) 또는 향족(鄕族)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 요호부민층(饒戶富民層) -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성장하였으며 기존의 사족과 '향전(鄕戰)'을 전개하였다.<sup>106)</sup> 그들은 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향입의 자리에 진출할 수 있었고 신분 상승, 수탈체계로부터의 이탈, 관권과의 결탁을 이루었다. 그리고 수령권을 매개로 하여 사족의 향촌지배에 도전한 것이다. 향전을 통해서 사족의 향촌지배는 축소되었으며 사족은 촌락, 혹은 혈연적 유대를 통해서만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sup>107)</sup>

국가는 각 계급내부의 응집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국가는 환곡의 고리대적 운영과 민고(民庫)의 설치를 통해서 지방수령이 독자적 재정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여 수령권의 강화를 목표로 했다.<sup>108)</sup> 지방관에게 많은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진 것은 세금수취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형태였다.<sup>109)</sup>

조선후기 국가의 지배는 계급관계의 규정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19세기의 농민봉기 대부분은 지주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수취체계 왜곡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발생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10)</sup> 조선사회의 안정성은 국가와 양반귀족 사이의 균형적인 지배 - 이데올로기적 통제 - 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의 확충을 위한 노력은 농민개인에 대한 세부담 강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sup>111)</sup>

---

106. 정진영, 1991

107. 정진영, 1991

108. 조선 후기 국가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환곡'도 지방행정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방단위로 운영되기 시작했다.(김옥근, 1984)

109. 정진영, 1991.

110. Dongno Kim, 1994. 앞의 책, 57쪽의 Table 1

111. 호포제를 실시하여 양반에게도 세부담을 지우려던 대원군의 개혁이 실패로 돌

계급관계보다는 신분이 더욱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분의 규정이 역과 세금의 수취를 판정하였으므로 농민들은 부의 축적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분의 상승을 노렸으며 집단적인 계급의식의 고취를 통한 불평등의 해소는 갑오농민전쟁 이전까지 - 시장경제의 침투가 있기 전에 - 등장하지 않았다. 112)

조선후기 국가지배의 강화는 지주와 농민계급의 응집력 약화라는 기회에 편승한 것이었므로 국가수취의 강화로 이어졌을 뿐 경제적 발전을 위한 가능성은 애초부터 결여된 것이었다. 지방관리의 권한강화를 통해 이룩하려 했던 세금수취의 강화는 관리의 부정부패와 연결되면서 농민층의 광범위한 저항에 처하게 되는 운명을 맞고 말았다.

---

아간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팔레, 1994.

112. 신분과 계급의 불일치로 인한 개별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계급의식의 확산을 억제하는 측면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 IV. 결론: 농업의 노동집약화와 국가지배력의 강화

17~19세기 한국사회의 인구변동은 '인구의 증가'와 '노동력의 농업부문 흡수'를 두 축으로 이루어 졌다. 3세기에 걸쳐 약 700~1,000만 정도의 인구증가(70~100%)가 있었으나, 전체인구에 대한 도시의 인구의 비율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인구증가에 비례하는 정도의 경작토지증가가 결여된 상태에서 인구의 증가분은 대부분 전통적인 농업부문에 흡수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노동력의 농업부문에 대한 흡수는 농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조선전기에 150만 결에 달했던 경작면적은 후기에 눈에 떨 정도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농업의 노동집약화는 가속되었다. 잉여노동을 손쉽게 구하여 토지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대적 경제발전의 핵심이 되는 '노동절감형의 발명'이 억제되고 늘어난 노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발전만 자극된다. 따라서 근대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의 발전은 결여된 상태에서 생산증가를 대부분 노동의 집중적 투여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농업의 변화는 농민의 지주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시키게 되어 계급융집의 가능성은 크게 저하되었다. 지주의 입장에서조차 조선 전·후기에 걸친 변화는 대농장을 경영하던 초기 관료지주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계층의 성장을 낳았다. 노동력의 절적인 활용과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된 생산력을 통해 경제력을 획득한 요호부민층은 신향 또는 향족이라 불렸으며 기존 사족과의 '향전(鄉戰)'을 통해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구증가로 인한 농업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지주층의 분열을 통해 양반 지주층이 계급으로 융집될 수 있는 계기도 역시 좌절시켰다.<sup>113)</sup>

---

113. 양반계급의 지배가 오직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보다 강했기 때문에 지주와 농민, 양 계급의 성장이 저해되었다는



한편, 국가는 농민과 지주계급의 약화와 세력교체를 활용하여 세금수취를 강화하려 하였다. 효율적인 재산권의 보장을 통한 사회전체의 경제적 부를 발전시키는 방향과는 반대되는 이 길은 국가의 입장에서 거래비용 - 공공재와 반공공재의 제공 - 의 최소화과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는 세금의 수취를 위해서 지방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으며 수령은 새롭게 성장하는 신향들을 향임의 자리에 앉히는 타협을 통해서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세금수탈의 강화는 그 근본적인 성격 때문에 결코 경제적 발전을 위한 의도로 사용될 수 없었고 지방수령과 향리층의 결탁에 의한 부패의 가속화를 통해 결국은 농민층의 광범한 저항에 직면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II장에서 제시된 여러 모델들과 관련하여 논문의 결과는 몇 가지 의미있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조선사회에서 계급관계는 주갈등관계로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 국가는 각 사회세력에 대하여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후기로 가면서 재지사족의 권한은 눈에 띄게 축소되어 갔다. 둘째, 농민과 지주계급은 국가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고 경제활동에서 합리적인 경쟁의 규칙 - 제도의 수립 - 을 요구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제도주의 모델에 제시된 경제적 발전의 가능성은 실현되지 못했다. 인구의 증가와 농업구조의 변화는 그 저변에 자리잡은 한 이유가 된다.

논문의 결과에 비추어 볼때 '조선봉건제론'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조선봉건제론'은 조선후기의 인구증가와 농업노동력의 증가라는 이 논문의 연구결과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후기에 인구의 절대증가가 700~1,000만에 달했고, 도시 상공업부문의 노동력 흡수가 미약하여 인구증가분은 농업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봉건제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토지로부터 노동력을 이탈시킬 수 있을 정도의 - 혹은 노동력의 분화를

---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송준호는 조선후기에 양반계급의 경제적 지배 - 대표적으로 토지의 소유 - 는 눈에 띄게 축소되었지만 이데올로기적 지배 - 계급지배가 아닌 '양반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분적 지배 - 는 끝까지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송준호, 1987,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14쪽

통한 봉건제의 해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 정도의 - 노동생산력 증대'는 부재하였다. 그리고 세금 수탈 강화로 대표되는 국가의 지배력 강화<sup>114)</sup>도 국가를 이론들 속에 포함하지 않는 봉건제론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은 인구의 과중한 압력으로 인한 노동집약적 농업화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 인구의 절대 증가와 도시부문의 저발전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인구집중도 올바르게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활용한 국가의 지배력 강화와 국가-농민의 대립을 정태적인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틀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조선봉건제론'/'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구분은 '물질적 성장의 척도'<sup>115)</sup>로 기능할 뿐이다. 조선사회에 대한 두 이해는 국가와 계급의 상호작용 메카니즘 -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정요인 - 을 밝힐 수 없다. 인구증가를 계기로 드러난 것처럼 각 계급과 국가는 변화된 사회경제적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전개하였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는 '국가지배력의 강화'와 '계급응집력의 약화'였다.

조선후기의 경제발전에 대한 이 논문의 분석은 조선사회의 '저발전'<sup>116)</sup>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시대의 물질적 발전정도를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

114. 조선후기 국가의 지배력 강화는 주로 세금수탈의 강화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부구조력'의 강화라기보다는 '전제적 지배력'의 강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Mann)에 따르면, '하부구조력의 강화는 근대적 경제발전의 기초로 작용하지만 전제적 지배력의 강화는 일과적인 성격에 그친다'.(Mann, 1988. 8~11쪽)

115. 한 사회의 화석화된 경제적 발전 혹은 저발전을 재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자는 사장되어 있다.

116. 한국의 전자본주의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아시아사회의 특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경제적 저발전과 연관되어 종종 '식민사관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비판되어 왔다. 그러나 식민사관에 대한 진정한 극복은 경제적 발전/저발전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발전의 '정도'보다는 변동의 방향과 변화의 메카니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제에 의하여 그 가능성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그것은 폭넓게 보아 일제에 의한 '왜곡된 근대성의 이식(移植)'을 제도적, 문화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일이다.

한국전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인식과 식민사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박명규, 1991. 그리고, 이영훈, 1992.

‘경제적 발전/저발전’이라는 계기에 놓여진 사회변동의 메카니즘을 명료화시켜서 오늘 한국사회의 제도적 뿌리를 찾으려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구증가’라는 한 변수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조명하려 했다.

인구변화는 많은 부분에서 국가를 매개로 하고 있었다. 인구의 파악은 국가의 지배력을 가늠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으며, 국가는 구휼사업을 통해서 인구변동의 과정에 직접개입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국가는 동시대의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중앙집권적인 지배를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경제적 성장은 전자본주의사회에서 강력한 국가의 존재로 인하여 그 기초가 확보되어 있었지만 생산관계에 미치는 과도한 압력 때문에 한계가 설정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구의 성장과 약화된 계급의 힘을 매개로 하여 국가는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보다는 독점적 수입의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세금수취구조의 왜곡과 농민의 궁핍화는 피할 수 없었다. 농민과 지주는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농업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계급응집력을 상실하였고 국가에 대항하여 효율적인 제도의 수립을 요구할 수 없었다.

한국경제발전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주목되는 ‘강력한 국가’의 제도적 전통은 발전론의 역설을 느끼게 한다. 결과적으로 전자본주의사회에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였던 한국의 강력한 국가가 근대사회에서는 경제적 발전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경제발전’이라는 종속변수를 낳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묶음의 조건들은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시점의 변화와 그 결과로서 형성, 변화된 제도적 전통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앞의 시점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물질적 목표의 성취라는 단기과제는 한 사회의 짜임새와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다. 과거의 변화 메커니즘을 조명하는 일은 단기적인 경제적 발전 혹은 정체를 예측하는 의미를 벗어나서 오늘의 사회구조가 이어받고 있는 제도적 유산을 확인하는 확대된 형태로까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세계사적 위치를 확보한다. 조선과 중국은 유사한 인구압력을 경험하였고 노동 집약적 농업의 발전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존재로 인해 노동절약적 기술발전과 비농업부문의 노동력 흡수를 통한 근대적 경제발전의 길이 좌절되었다.<sup>117)</sup> 반면에 일본은 비교적 낮은 인구압력을 출발점으로 노동절감형의 기술발전과 도시상공업부문에 의한 농촌잉여노동력의 흡수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sup>118)</sup>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근대적 경제발전의 성취와 좌절은 발전과 저발전의 단순한 이분법을 벗어나 행위자 - 계급과 국가 - 의 상호작용과 그 바탕 그리고 결과로서의 제도를 확인함으로써 과거의 한 사건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변화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

---

117. 중국의 인구변동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Philip Huang, 1985. & Mark Elvin, 1973.

118. Irene Taeuber, 1958. & Clifford Geertz, 1964.

1908년의 36개 도시 인구자료(호구수 1,000 이상의 도시)

(자료: 『제3차 통감부 통계연보』, 1908)

도시명	구분	호 구 수		총 인 구
		한국인	총 합*	
경 성		30,721	36,782	160,842
인 천		4,458	7,791	29,203
용 산		1,153	3,203	11,704
수 원		1,825	2,106	6,446
개 성		7,695	8,178	25,032
강 화		1,182	1,187	4,468
조 치 원		1,082	1,192	2,620
공 주		1,329	1,567	5,277
대 구		4,304	5,389	20,115
부 산		7,450	12,575	50,698
동 래		2,080	2,144	9,310
김 해		1,760	1,805	8,526
밀 양		1,945	2,086	8,970
울 산		1,362	1,431	6,008
마 산		1,566	2,549	10,807
통 영		2,998	3,195	13,578
진 주		17,553	17,749	78,532
군 산		469	1,344	4,687
전 주		3,412	3,644	14,962
남 원		1,903	1,931	7,635
나 주		962	1,053	4,302
광 주		1,786	2,019	7,283
제 주		1,360	1,401	4,114
목 포		1,266	2,062	8,191

(\* 총합은 외국인 호구와 한국인 호구를 모두 합한 것이다)

- 앞 쪽에서 계속

도시명	구분	호 구 수		총 인 구
		한 국 인	총 합*	
해 주		2,727	2,848	8,831
황 주		1,560	1,710	6,148
춘 천		985	1,056	2,083
평 양		4,290	6,202	23,619
안 주		1,035	1,100	5,001
진 남 포		2,561	3,436	10,216
의 주		1,894	2,017	8,135
북 진		900	1,084	4,480
원 산		2,360	3,452	15,918
함 흥		2,915	3,276	13,806
북 청		1,577	1,640	6,529
길 주		1,084	1,099	4,100

-- 도움받은 글 --

【자료】

- 『戶口總數』, 서울대학교 고전총서  
『統監府統計年報』, 第1次 - 第3次  
『譯註 牧民心書』, 다산연구회 譯註, 창작과 비평

【우리말 문헌】

- 고동환, 1991, 「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권태환·신용하, 1977,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일 시론」, 『동아문화』 제  
14집  
권태환·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근대사연구회 편, 1987,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下)』, 한울  
길인성, 1994, 「신제도학과 경제사의 성과와 한계」, 『사회비평』 11호, 나남  
김대환 편역, 1984, 『자본주의 이행논쟁』, 동녘  
김두섭, 1990, 「조선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24집 여름  
\_\_\_\_\_, 1992, 「조선시대 한성부 인구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26집 겨울호  
김옥근, 1984, 『조선왕조재정사연구』, 일조각  
김용섭, 1970, 『조선후기농업사연구1』, 일조각  
\_\_\_\_\_, 1970(1990), 『조선후기농업사연구2』, 일조각  
\_\_\_\_\_, 1988, 「근대화 과정에서의 농업개혁의 두 가지 방향」, 『한국자본주의 성격  
논쟁』, 대왕사

- \_\_\_\_\_, 1992,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 김홍식, 1990, 『대한제국기의 역사적 성격』,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 박명규, 1991, 「낯은 논리의 새로운 형태: 宮嶋博史의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  
研究> 비판」, 『한국사연구』 75.
- 박상태, 1987, 「조선후기 인구-토지 압박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제21집 겨울호
- 배영순, 1987,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토지신고와 소유권 사정 - 김해군을 중  
심으로」, 『인문연구』 8-2., 영남대학교
- 안병직 · 이대근 · 中村哲 · 梶村秀樹 編, 1989,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 유석춘, 1989, 「제3세계 발전론의 현황과 전망」, 『연세사회학』 제9호
- \_\_\_\_\_ 편, 1992,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나남
- 은기수, 1987, 『조선조 인구 및 신분연구자료로서의 호적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구 · 이호철, 1987,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추계(Ⅰ)」, 『경영사학』 제2집
- \_\_\_\_\_, 1988,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추계(Ⅱ)」, 『경영사학』 제3집
- 이영훈, 1986, 「조선사회구성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약간의 고찰」,  
『태동고전연구』2
- \_\_\_\_\_, 1987, 「한국자본주의의 맹아문제에 대하여」, 『한길역사강좌5』, 한길사
- \_\_\_\_\_, 1988a,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 \_\_\_\_\_, 1988b,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역사비평』  
여름
- \_\_\_\_\_, 1988c, 「조선봉건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 대왕사
- \_\_\_\_\_, 1992, 「토지조사연구에 있어서 몇가지 이론적, 실증적 문제들 - 宮嶋博史  
씨의 최근 저작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 16호
- \_\_\_\_\_, 1993,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역사비평』 제22호
- 이호철, 1986, 『조선전기농업경제사』, 한길사
- \_\_\_\_\_, 1988, 「조선시대사회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역사비평』 봄
- 이호철, 1993, 「사회, 국가, 그리고 제도: 정치경제의 제도론적 접근」, 『한국과 국제



정치』 제9권2호

- 정진영, 1991, 「19세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와 대립관계」,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 조성윤, 1988, 「“조선후기 인구-토지압박에 대하여”에 대한 논평」, 『한국사회학』  
제22집 겨울호
- \_\_\_\_\_, 1992, 「조선후기 서울주민의 신분구조와 그 변화」,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 \_\_\_\_\_, 1994,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증가와 공간구조의 변화」,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43집, 문학과 지성사
- 최윤오, 1991, 「18,19세기 계급구성의 변동과 농민의식의 성장」, 『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 최재현, 1992a, 「유럽의 봉건제도」, 역사비평사
- \_\_\_\_\_, 1992b, 「열린 사회학의 과제」, 창작과비평사
- 한영우, 1977, 「조선전기 호구총수에 대하여」, 권태환·한초연 편, 『인구와  
생활환경』
- 宮嶋博史, 1990, 「광무양안의 역사적 성격」,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 中村哲, 1989, 「근대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주제의 성격과 유형」,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 【외국어 문헌】

- Anderson, Perry 1974.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Verso
- 김현일 외 역, 1993, 『절대주의 국가의 역사』, 소나무
- Brenner, Robert 1976. "Agrarian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re-Industrial Europe", *Past and Present* No.70
- \_\_\_\_\_, 1977. "The Origin of Capitalist Development: A Critique of

- Neo-Smithian Marxism", *New Left Review* Vol. 104
- \_\_\_\_\_, 1982. "The Agrarian Roots of European Capitalism", *Past and Present* No.97
- \_\_\_\_\_, 1986. "The Social Bases of Economic Development", in *Analytical Marxism*, ed. by John Roemer,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E. Durkheim, 1984.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Free Press, New York,
- Eckert, Carter J., 1993. "The South Korean Bourgeoisie: A class in Search of Hegemony", in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ed. by Hagen Koo, Cornell Univ. Press, Ithaca and London
- Elvin, Mark, 1973.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Eyre Methuen Limited, London
- Geertz, Clifford, 1963. *Agricultural Involution: The Proces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Hanley, Susan B. 1969. "Population trend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okugawa Japan: the case of Bizen province in Okayama", in *Population and Social Change*, Edward Arnold
- Hanley, Susan B. & Kazo Yamamura, 1969. "Population trends and economic growth in pre-industrial Japan", in *Population and Social Change*, Edward Arnold
- Ho, Ping-Ti 1959. *Studies on the Population of China 1368-1953*,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정철웅 옮김, 1994, 『중국의 인구』, 책세상
- Huang, Philip C.C. 1985. *The Peasant Economy and Social Change in North China*, Stanford Univ. Press
- \_\_\_\_\_, 1991. "A Reply to Ramon Myer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0, No.3
- \_\_\_\_\_, 1993. "Public Sphere / Civil Society in China?", *Modern China* Vol. 19

No 2.

- Kim, Dongno 1994. *Peasants, State, and Landlords: National Crisis and The Transformation of Agrarian Society in Pre-Colonial Korea*, Ph.D.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 Koo, Hagen 1993. "Strong State and Contentious Society" in *State and Society of Contemporary Korea* ed. by Hagen Koo
- Lee, Hochul 1993. *Political Economy of Land Reform: A Historical Institutional Explanation*, Ph.D.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 Lew, Seok-Choon 1994. "Domination Structure and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Unpublished Paper.
- Lin, Justin Yifu 1995. "The Needham Puzzle: Why the Industrial Revolution Did Not Originate in Chin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43 No.2
- Mann, Michael 1988. "The Autonomous Power of the State", in *States, War & Capitalism*, Basil Blackwell
- Marx, Karl 1978. *Pre-capitalist Economic Formation*  
성낙선 옮김, 1988,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 지평
- Myers, Ramon H. 1991. "How Did the Modern Chinese Economy Develop?",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0, No.3
- North, Douglass C. & Robert P. Thomas 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th, Douglass C. 1981.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W.W. Norton & Company
- \_\_\_\_\_.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New York
- Orru, M & N. W. Biggart & G. Hamilton, 1991. "Organizational Isomorphism in East Asia", in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Univ. of Chicago Press

Palais, James B. 1975.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Harvard Univ. Press

이훈상 역, 1993, 『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 신원문화사

Polanyi, Karl 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Beacon Press.

박현수 옮김, 1991, 『거대한 변환』, 민음사

Postan, M. M. & J. Hatcher 1978. "Population and Class Relations in Feudal Society", *Past and Present* No.78

Rotberg, R. I. & T. K. Rabb, 1986. *Population and Economy*, Cambridge Univ. Press

Smelser, Neil J., 1992.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n Theories of Social Change", in *Social Change and Modernity*,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Los Angeles

Smith, Thomas C. 1959. *The Agrarian Origins of Modern Japan*, Stanford University Press

Taeuber, Irene B. 1958. *The Population of Japan*, Princeton Univ. Press

Tang, Anthony 1979. "China's Agricultural Leg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8,

Thelen, Kathleen & Sven Steinmo, 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ructuring Politics*. Cambridge Univ. Press

Will, Pierre-Etienne 1988. *Bureaucratie et famine en Chine au 18<sup>e</sup> siècle*, Mouton Editeur

정철웅 옮김, 1995, 『18세기 중국의 관료제도와 자연재해』, 민음사

Wong, R. Bin 1992. "Chinese Economic History and Development: A Note on the Myers-Huang Exchang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1, No.3

Wrigley, E.A. 1969. *Population and History*, McGraw-Hill, London

## ABSTRACT

### Population Pressure and the Socio-economic Change in Pre-capitalist Korea, from 17th to 19th Centuries

Jong-Il Park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While it is indispensable to investigate the pre-capitalist social structure in verifying the traits of modern Korea, due attention has not been paid to the field. Moreover, the two contending approaches to Korean pre-capitalist history, "feudalism" and "Asiatic mode of production", are very problematic and controversial. In this thesis, with the focus on the demographic change, I intend to provide clear view on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Korea from 17th to 19th centuries and to examine the two dominant approaches.

As a first step, I review four theories - Malthusian, Commercialization, Class Relations, and Institutional models - of the relation between population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Among others the Institutional model makes two noticeable contributions; the role of state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ctor-oriented perspective.

After the review and examination of various models, the framework for the analysis is constructed in the third chapter. "Demographic change" as an independent variable eventually determines the "economic development /underdevelopment" by way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urbanization", "surplus labor-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tate power".

Next step is to provide the overlook view of socio-economic change of Korea

from 17th to 19th centuries. First, there was considerable population pressure during the period. Second, most of the increase in population is absorbed in the traditional agriculture system for the lack of capability of industrial sectors. Third, the easy accessibility to surplus labor modified the agriculture to more labor-intensified form and frustrated the possible economic development to be propelled by increased labor productivity. Finally, the state made use of the socio-economic change initiated by the population pressure. It strengthened the despotic power to levy more taxes by authorizing additional power to local officials.

Considering the above discussions, two implications of the thesis are suggested. First, the population pressure of traditional Korea hindered the labor-sav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griculture, and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moved slightly upward, if not stand still, only by dint of rising land productivity. Second, the two contending approaches to pre-capitalist Korea, "feudalism" and "Asiatic Mode of Production", are improper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s of social actors - state, landlords, and peasants - in the context of demographic change. It is desirable to specify "the relations" among the actors and to focus on "the process" of socio-economic change rather than to evaluate the pre-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omnipotent but blind measure of modernization.

**Key Words:** Population, Population Pressure, Pre-capitalist Society,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of Agriculture, Urban Population, State Power, Feudalism, Asiatic Mode of Production, Institutionalism,